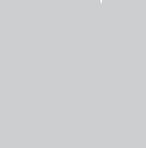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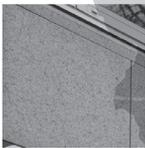


# 16

독일통일 총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16

독일통일 총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16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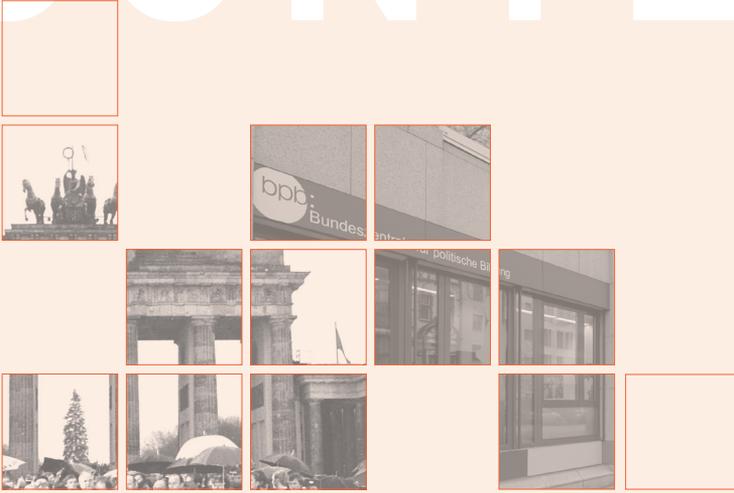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 CONTENTS



## 독일의 통일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b>제1장 서론</b>	<b>10</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b>제2장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개관</b>	<b>13</b>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14
1.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	14
2.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33
3.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비교	48
제2절 독일통합과 통일 후 정치교육	52
1. 학교정치교육 분야 통합	53
2.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59
3. 통일 후 독일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67
<b>제3장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b>	<b>81</b>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81
1. 정치교육 관련 연구	81
2. 통일교육 관련 연구	8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7

<b>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	<b>89</b>
제1절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	89
제2절 독일이 주는 시사점	91
1. 통일을 보는 관점	91
2. 통일 이전부터 준비할 사항	94
3. 통일 이후 강조할 사항	102



## 정책문서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

들어가며	120
<b>제1장 민주시민교육의 정착</b>	<b>122</b>
제1절 서독의 민주시민교육과 동독의 국가시민교육	122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전통	123
2. 서독의 민주시민교육	125
3. ‘국가시민교육’ 수업의 개혁을 둘러싼 동독정부 내의 논의	129
제2절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132
<b>제2장 직업교육 - 계속교육/재교육</b>	<b>141</b>
나가며	147

# CONTENTS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2

문서 요약 162

문서 요약(문서번호 1~60) 16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 표 목차

표 1-1) 서독의 주요 사회정치교육기관 28

표 1-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45

표 1-3) 통일 전 동서독 학교정치(사상)교육 비교 50

표 1-4) 통일 전 동서독 사회정치(사상)교육 비교 52

표 1-5)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57

표 1-6)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 주요 사업(1990-1999년) 66

표 1-7) 동서독주민의 정당 지지율 80

표 1-8) 통일문제의 정치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93

표 1-9) 사회통합 관련 한국과 독일 비교 97

표 1-10) 주요 사회지표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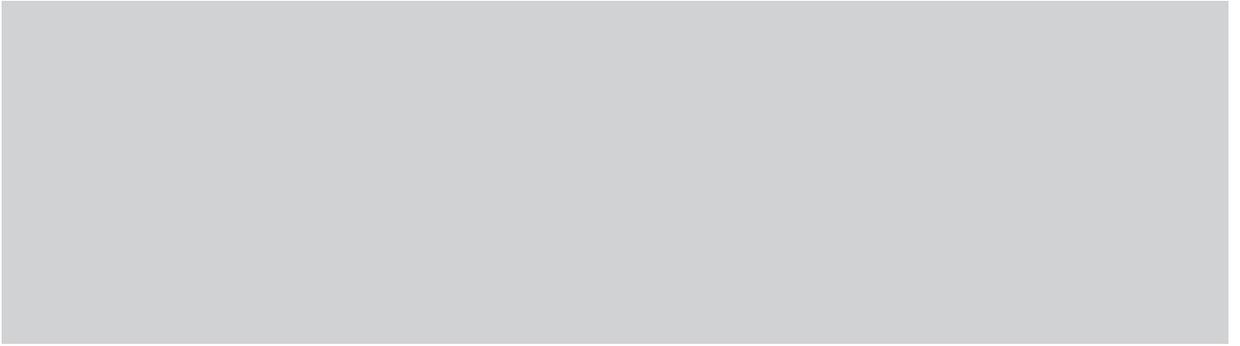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표 1-1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02

표 2-1) 통일 전 서독 민주시민교육 현황 129

표 2-2) 통일된 독일의 정치재단 139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독일의 통일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김 창 환 (한국교육개발원)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독일과 한국은 유사점이 많은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이 되었고, 냉전체제 속에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공통점이 있다. 분단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준비한 점도 유사하다. 그러다가 1990년 운이 좋게 독일이 먼저 통일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올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북한이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 놓이면서 최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먼저 참고할 만한 선행 사례들을 찾게 된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상호대결과 이념갈등을 겪었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후 각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여, 1990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통일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으나, 통일이 민족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통일을 준비하

는 교육을 실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진행과정과 통일준비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무조건 수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통일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통일을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점과 버릴 점, 생각해야 할 점, 올바른 통일교육의 모습 등을 찾을 수 있다.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서독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화적인 갈등해결 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과 통일 후 독일의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일 이후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우리의 통일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통일 전후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통일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 및 통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전 서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기본지침, 통일교육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서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통일 전 동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동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통일 이후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어떻게 통합되고 변화하였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구분하여 국내 연구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 전후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독일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분야의 독일 주요 문헌과 정부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개관

통일 전 독일에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서독) 또는 정치사상교육(동독)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졌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독일문제(Deutsche Frage)에 대한 교육’으로 불리어졌다. ‘독일문제’라는 이름으로 동독에 대한 지식을 매개하고, 동서독을 비교하고, 독일 주변의 국제정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냉전체제 하에서 동서유럽 간의 긴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동서독 문제를 일부 다루었다. 즉,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사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틀 안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이 행해졌다. 정치사상교육은 서독의 정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



의 이념을 교화시키는 교육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가르쳐 그러한 이념으로 무장된 사회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의 주 관심사였다.

이 장에서는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을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정치교육을 고찰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 1.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크게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정치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정치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정치교육은 주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내독성 산하 ‘전독(全獨)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은 전 국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독 및 동구권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국가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1) 통일 전 서독의 학교정치교육

##### (1) 학교정치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에서의 학교정치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Sozialkunde)’, ‘역사(Geschichte)’, ‘지리(Edrkunde)’ 등의

교과에서 정치교육을 다루었다. 통일교육 역시 ‘사회’, ‘역사’, ‘국어’, ‘지리’ 등의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교과는 ‘사회’ 교과였다. ‘사회’ 교과는 주에 따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교과에서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정치교육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9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4학년(13학년)<sup>1</sup>까지 ‘사회’ 교과 안에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11~13학년)의 경우에는 반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회과는 주당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5-6시간이 배정되어 가르쳐졌다. ‘사회’ 교과를 위하여 서독의 각 주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지침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치교육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교수학습용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학교정치교육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적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전후 독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서독의 통일정책 및 동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의 통일정책과 대동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  
<sup>1</sup> 통일 전 서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3학년(우리나라는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첫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의 관계단절 단계이다.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양 국가가 수립되었고, 양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서독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정책 제안들에 대하여 일체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서독정부의 이러한 기본 입장(할슈타인-독트린)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서독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동독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계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모색 단계이다. 1962년 쿠바 위기가 평화롭게 극복되고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동서독의 정치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독 외교부장관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는 ‘변화의 정책(Politik der Bewegung)’이란 이름 하에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 조심스럽게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독의회는 동유럽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만장일치로 표명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후 신동방정책의 대변인이었던 에곤 바(Egon Bahr)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구상을 밝히게 된다. 이러한 구상은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게 된다. 빌리 브란트는 1963년 유명한 ‘작은 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베를린 시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66년 기독교민주당(보수당)과 사회민주당(진보당)이 거대 연정을 구성하면

<sup>2</sup> M. Glaab(1996).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pp.178-188.

서, 외교부장관을 맡게 된 빌리 브란트는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때부터 동독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되었다.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관계정상화가 모색되었다.

셋째 단계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기반 구축 단계이다. 1969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서독의 동독정책 및 통일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W. Brandt)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요지의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여,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다.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는 ‘민간인과 물자의 서독과 서베를린 간 통과교통에 관한 동·서독정부 간 협정’과 ‘여행 및 방문완화와 개선에 관한 서베를린 시 당국과 동독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서베를린주민의 동독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었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였다. ‘기본조약’에 따라 동독은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받았고, 서독은 독일의 단독대표권과 할슈타인 원칙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여 동서독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서독 관계에서는 비록 타협될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1974년에 브란트의 후임으로 슈미트 수상이 등장한 이후 동독에 대한 실용주의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슈미트 수상은 통일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곧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하위정치



(low politics)'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을 구사하여 내독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sup>3</sup>. 슈미트 수상은 동독이 서독과의 각종 교류에 협력할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고, 동독의 태도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부각시켰고, 1975년부터 대동독 무상지원을 개시하는 등 동독지원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중점은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특징, 동독의 경제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서독의 체제, 생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키고 비방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실현과 유럽의 평화정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단계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이다. 1982년 정권교체와 함께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H. Kohl) 정부가 탄생하였다. 콜 정부는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보수당인 기민당의 동독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냈고, 국회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콜 정부의 동독정책에서는 양독 국민들의 공동체意識이 강조되었고, 동서독국민의 만남과 교류가 강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독과

.....  
<sup>3</sup> 최의철(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p.49.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고, 상호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M. Gorbachew)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1987년에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E. Honecker)가 서독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3) 통일교육 지침

서독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독일문제(Deutsche Frage)’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독일문제와 관련된 주제 영역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13일 KMK(Kultusministerkonferenz, 서독 주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동구권에 대한 이해(Ostkunde)’라는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다룰 것을 결정한 이후이다.<sup>4</sup>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는 소련의 지배로 인해 독일국민들이 추방되고 동서독이 분단된 점을 알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운명은 이러한 과제를 잘 성취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 해결점은 동구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은 초·중등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 점이 강조된다. 첫째, 평화와 자유의 원칙 아래 독일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련점령지인 동독에

<sup>4</sup>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p.7.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동구권 체제와 논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구권의 인종, 문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sup>5</sup> KMK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역사교육’과 더불어 ‘정치교육’과 ‘언어교육’을 강조하였다. “정치교육은 첫째, 통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이론과 실제에 있어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동유럽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이 서독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sup>6</sup> 언어교육 역시 동유럽 언어에 대해 그동안 소홀히 한 것을 비판하고 동구권 언어, 특별히 러시아어를 적어도 김나지움에서는 필수 또는 선택어로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도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sup>7</sup>

1972년 브란트 정부에 의해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통일교육과 관련된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교육학적인 또는 정치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1978년 6월 서독국회의 내독관계위원회는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독일의 대통령 발터 쉘(Walter Schell)은 1978년 8월 17일에 행한 연설에서 모든 학교와 교사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자유 속의 독일통일을 향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바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임을 강조하였다.<sup>8</sup>

<sup>5</sup> ibid., p.7.

<sup>6</sup> ibid., p.9.

<sup>7</sup> ibid., p.9.

<sup>8</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뿐만 아니라 1978년 보스만(D. Bossman)은 서독의 각급 학교 학생들(13~24세)을 대상으로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생각들을 조사·발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감정적인 반공 의식과 함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의 참여 준비성은 결여된 채, 베를린에 대하여는 강한 감정적 유착심을 갖고 있으며, 동독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9</sup>. 또한 이보다 먼저 1975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학생의 80%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56%는 1953년 6월 17일의 동독 의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2/3는 베를린 장벽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80%는 베를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KMK는 1978년 11월 23일 ‘학교에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을 결정해 발표하였다<sup>11</sup>.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침은 통일 이 될 때까지 서독의 각급 학교를 위한 통일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서독 주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지침서는 서독의 모든 주에 적용되었다.

서론에서는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러

<sup>9</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sup>10</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sup>11</sup>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pp.245-256.



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독과 동독주민과 동독의 발전과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독일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무엇보다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문제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확고하게 강조되어야 한다....”<sup>12</sup>

제1장에서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독의 기본법, 동서독 기본조약, 서독의회와 서독정부의 입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서독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서독을 넘어서서 독일 전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독 기본법에서는 독일국민들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두 독일 국가가 평등의 원칙 아래 국경을 상호 존중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쌓아 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독의회는 1972년 5월 10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의지를 만장일치로 천명하였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7년 6월 17일 독일이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와 통일이 모든 독일민족의 염원임을 천명하였다....”<sup>13</sup>

제2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독의 청소년들이 독일의 분단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동일하게 분단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서독주민들 사이에도 분단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독일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전체 국가사회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학교의 과제이다.”<sup>14</sup>

.....  
<sup>12</sup> ibid., p.246.

<sup>13</sup> ibid., pp.246-247.

<sup>14</sup> ibid., pp.247-248.

이와 같은 기본 입장 하에 제3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체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 요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동독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1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주민들도 독일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15. 독일은 서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sup>15</sup>.

제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9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무엇보다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독일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학생들은 독일국가의 멜로디를 알아야 하며, 3절을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국가임과 베를린이 옛 수도임을 알아야 한다. 4. 역사적인 관점에서 독일민족의 탄생과 독일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5. 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구조,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상태를 가르쳐야 한다. 6.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서독뿐 아니라, 동독과 독

<sup>15</sup> ibid., pp.248-255.

일제국 당시의 독일 영토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7. 국어 교과에서는 특별히 중등교육에서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동독의 문학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8.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특별히 미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문제와 동독의 상황에 대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9.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평결은 수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6</sup>.

제5장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들이 편찬·제작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에서도 이 합의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sup>17</sup>.

통일교육 지침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Konsens)’이다. 1976년 독일의 정치교육학자들이 남부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정치교육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sup>18</sup>.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첫째 합의는, ‘교조주입 금지원칙’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학생들의 자주적인 판단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합의는, ‘논쟁성 투명화원칙’이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쟁점을 그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합의는,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이다.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sup>16</sup> ibid., pp.255-256.

<sup>17</sup> ibid., p.256.

<sup>18</sup> 전득주·페터마싱·허영식 편(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엠-에드. pp.16-17; Georg Weissenho(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vor 1990,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6-27.

자신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학생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 (4) 통일교육(‘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교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펴기 전과 후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방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방정책 이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 전에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문제(Deutsche Frage)’라는 주제 아래에서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동독의 비민주적인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동서독 독일민족과 국가가 하나임과 독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면서도 냉전시대를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의 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통일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더불어 동서독국민들이 독일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진 통일 환경은 통일교육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제시된 1978년의 통일교육 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



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방정책 이전에는 동독을 비하하고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방정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동독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조한 점, 동독주민을 한 민족으로 보고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강조한 점 등은 분단 후 통일이 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져 온 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sup>19</sup>.

## 2)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

### (1) 사회정치교육 개요

사회정치교육은 성장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말한다. 기성세대는 이미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정치교육은 성인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정치교육은 학교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이란 차원에서 폭 넓게 이루어졌다. 원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나치즘(Nazism)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것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52년 내무성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센터(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를 설치하였다. 1963년에는 명칭

<sup>19</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23.

을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로 바꾸고, 1966년 9월에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 시행하였다<sup>20</sup>.

통일 전 서독에서의 사회정치교육은 정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전독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관련기관인 11개의 주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함께 통일교육을 주도해 나갔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이지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상 성인 정치교육기관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다. 11개의 주정치교육센터와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하고 지원하였다. 전독연구소도 내독성 산하기관으로서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과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들 역시 사회정치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법교육, 국제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바탕에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일교육의 주 목적이었다. 주요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동독에 대한 이해, 동서독 체제 비교, 동구권과 서유럽의 갈등, 국제정세 등이었다. 교육방법면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주된 방법이었다.

.....  
<sup>20</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97.

## (2) 사회정치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등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독일 4대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 그리고 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내독성<sup>21</sup>의 주요 과제는 독일정책을 입안하고,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통일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내독성의 통일교육은 산하 기관인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와 함께 수행하였다.

표 1-1) 서독의 주요 사회정치교육기관

주요 정치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방정치교육센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센터 바이에른 주정치교육센터 베를린 주정치교육센터 브레멘 주정치교육센터 함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헤센 주정치교육센터 니더작센 주정치교육센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치교육센터 라인란트-팔츠 주정치교육센터 자르란트 주정치교육센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치교육센터
내독성	전독연구소
정당 재단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개신교 정치교육기관 카톨릭 정치교육기관 경제단체 정치교육기관 정치 관련 연구소 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sup>21</sup> 독일문제와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1949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관이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서독국민의 정신에 민주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발족되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목적은 독일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제를 정치교육의 핵심 이슈로 다루었다. 1950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학생운동 등 사회적인 변혁이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 동방정책, 테러리즘이 핵심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과정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그리고 사회운동이 핵심 주제가 되었다.

### (3)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했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정치관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 사회정치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sup>22</sup>을 중심으로 통일 전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간행물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간행물 발간 사업이었다. 간행물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국회(Das Parlament)’, ‘국회’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 ‘확대경(Zeitlupe)’,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e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었다.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도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매년 각종 도서들이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고 폭넓게 읽혀졌다.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되는 도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교육 시리즈 간행물이었다. 편집서, 핸드북 또는 모노그래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즈 간행물은 1985년까지 모두 230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반도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팸플릿으로 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쟁점(Kontrovers)’이라는 팸플릿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주 대상으로 다루었고, 196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

.....  
<sup>22</su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6). Tätigkeitsbericht 1985, Bonn.

여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 및 편집되었다.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교과 수업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기획되었다.

#### ②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매년 100건이 넘는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연수 프로그램(Fachtagungen)과 동서지역담당지부 세미나 그리고 해외연수로 나누어진다.

#### ③ 시청각 매체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이 주요 매체로 활용되었다.

#### ④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70년부터 실시된 경연대회의 참가대상은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6-1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동아리, 특별활동그룹이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총 50,000개 학급의 1,500,000명의 학생들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였다. 학급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준비를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작업과 팀정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 (4) 통일 전 서독 사회정치교육의 효과

서독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사회정치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사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9년부터 나치가 집권한 1933년까지 민주주의를 시험할 기간이 있었으나, 국내 정세가 혼란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국가적 최대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교육은 그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통일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보냈다. 사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 서독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국민들은 기꺼이 신속한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독교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이 극대화될 때 서독국민들이 취한 자세와 행동이다. 1992년 동서 간의 심리적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 서독지역 국민들은 폭력 등 극단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민주적인 가치 아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일부 극단론자들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서독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사회에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독일통일을 완성하고 민주적인 통일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은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정치교육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서독의 정치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2.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면, 동독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은 한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이념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다. 서독에서는 통일교육 안에서 동서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동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 동독에서는 민족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사상교육만이 가능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의 정치사상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정치사상교육과 사회정치사상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정치사상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정치사상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정치사상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정치사상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 1) 통일 전 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

#### (1) 학교정치사상교육 개요

구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독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정치사상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국가시민(Staatsbürgerkunde)’ 교과가 있었다. 교과 외 활동으로는 군사교육 및 청소년 조직 활동을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 ① 국가시민 교과

통일 전 동독은 ‘국가시민’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국가시민’ 교과는 중학교 1학년(7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12학년)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시민’ 교과를 위하여 동독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sup>23</sup>.

7학년 때에는 동독의 역사와 사회적 질서를 배우는 것이 중점 내용이고, 8학년 때에는 동독의 헌법을, 9학년 때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 과정을 배우고, 10학년 때에는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11-12학년 때에는 변증법적 유물사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 ② 군사교육

국가시민 교과와 더불어 군사교육 역시 정치사상교육의 장으로서 강조되었다. 동독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다. 이 점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다. 군사교육은 그러한 준비를

.....  
<sup>23</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36.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군사교육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비군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군사교육의 과제는 1) 국토방위 동기 부여, 2)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 함양, 3) 군사정치적, 사회과학적, 군사적 지식과 능력 매개, 4) 용기, 순종, 희생정신의 함양과, 힘, 인내 등 신체의 단련 등이었다<sup>24</sup>.

군사교육은 이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인을 만나고, 군사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국토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군대와 군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도록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급과 상급단계의 학교교육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국가시민’ 교과에서 군사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군사지식이 전달되었다.

### ③ 청소년 조직 활동

동독은 정치사상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조직을 적극 활용하였다. 청소년 조직으로는 자유독일청년연맹(Freie Deutsche Jugend)과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sup>25</sup>과 유사한 조직이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하였다. 통일 전 전체의 70%의 학생이

.....  
<sup>24</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39.

<sup>25</sup>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4세부터 3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청년조직으로서 예술활동, 체육활동, 군사훈련, 노동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적 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직에 가입하였다<sup>26</sup>. 자유독일청년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반제국주의-민주주의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그 기능상 공산당(SED)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목적은 1) 청소년을 사회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가로 교육시키는 것, 2) 청소년들을 동독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 3) 청소년 군대조직의 건설, 4)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확산, 5) 다면적인 여가 선용 조직과 학습활동 장려 등이었다<sup>27</sup>.

자유독일청년연맹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1) 자유독일청년연맹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 2) 학습과 노동과 연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 3) 군사지식 획득과 노동자-농민 국가 방위태세 확립, 4)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결속력 강화, 5) 공동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 6)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조직을 홍보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었다<sup>28</sup>.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었다. 각 지방에는 지회를 두고 있었고, 지회에는 기업체, 행정, 학교, 대학, 공장 등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속하게 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최고 상급기관은 국회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휘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일간지를 발행하고, 각종 잡지를 발행하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청소년 조직이라면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조선소년단<sup>29</sup>과 유사한 조직

<sup>26</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3.

<sup>27</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0.

<sup>28</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0.

<sup>29</sup> 북한의 유소년 조직으로 만 7세부터 13세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토론회, 연구모임, 노동활동 등을 통하여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용감한 공산주의 전사'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1학년에서 7학년의 어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 전체 학생의 90%가 이 조직에 가입하였다<sup>30</sup>.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1948년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연합단체로 결성되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들을 평화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철저한 동독 국가 시민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주요 과제는 1) 학교가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는 것, 2)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 흥미있고, 교육적이고, 어린이에 맞는 활동의 개발 등이었다<sup>31</sup>.

자유독일청년연맹과 마찬가지로 에른스트 텔만 연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여러 상징적인 휘장들을 하고 다녔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 조직은 학교 내의 전체 조직과 학급 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지원하고 신문과 잡지도 발행하였다.

## (2) 정치사상교육 정책

통일 전 구동독은 한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였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로서 구실을 하였다<sup>32</sup>. 교육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의 통합’이

<sup>30</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3.

<sup>31</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1.

<sup>32</sup>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p.7.



구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핵심 원칙이었다<sup>33</sup>. 이 점은 정치사상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34</sup>. 첫째, 모든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었고, 교육행정 기관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의 사상적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현 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sup>35</sup>. 첫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로서 나치시대의 교육제도를 ‘반제국주의적이고-민주적인 교육제도’로 개혁하던 시기로서, 이때에는 사회주의 학교를 정착시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로,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정책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쳐 완전 정착되었다. 1949년 이후 정치사상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독일공산당(SED)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독일공산당은 정치사상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육 분야에서 완전한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  
<sup>33</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69.  
<sup>34</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15.  
<sup>35</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17.

독일공산당(SED)은 위와 같은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원칙들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sup>36</sup>. 첫째, 모든 정치사상교육 정책과 교육적 수단은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이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라는 전제 아래에서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과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회 변혁의 도구이다. 셋째, 정치-이념 교육, 정당의 영향, 학교, 교육, 생산 역시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격의 다면적 형성은 최종의 교육목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사회주의 도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 노동에 대한 애정,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이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실성과 우월성, 그리고 이념 논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소유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독일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교화시키고 사회주의 인간(sozialistische Persoenlichkeit)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sup>37</sup>. 이러한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 국가가 건설되고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 왔다. 서독에서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바뀐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사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76년 제9차 당 대회에서 구동독 수상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동독의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더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것을 요청한다.”<sup>38</sup>고 강조하였다.

<sup>36</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24.

<sup>37</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

<sup>38</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26.

### (3) 정치사상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기본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 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독 당국은 ‘국가시민’ 교과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달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9</sup>.

정치사상교육에서 매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인류 역사의 진보과정의 법칙적 귀결이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휘 아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결과요, 반인류적인 제국주의체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 사회주의 세계가 그 힘과 권력과 권위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했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역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학생들은 위의 사실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독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했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제국주의에 대

<sup>39</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3.

한 우월성 등을 인식하여야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야 했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세계관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이었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했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사상교육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초 능력이 강조되었다<sup>40</sup>.

-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발전 모습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볼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세계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독자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할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문헌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관련 문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중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사회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sup>40</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4.

#### (4) 정치사상교육 특징

구동독 정치사상교육 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적으로 구서독보다 일찍 정치사상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학교인 7학년부터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직 학생들의 추상적-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이전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치사상교육이 획일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정부가 교육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서독과는 달리 중앙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기획하고 모든 학교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7학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단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셋째, 정치사상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동독사회의 특징, 공산주의 정당, 사회주의 역사관, 동서독체제 비교 등이다. 서독처럼 폭 넓게 정치, 사회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동독체제의 우월성과 상대방 체제의 비난을 선전하고 주입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넷째, 구동독 정치사상교육 과정은 주요 교육내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동독에서 실시된 정치사상교육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화(Indoktrination)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교사들 역시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다섯째,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가치적인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

였다. 동독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던 구 서독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동독지역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불신을 갖게 하고, 통일 후 학생들의 사회 부적응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섯째,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 내용은 엄격히 말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 가르침과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과 의지를 심어주는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체제옹호교육이었다.

##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 (1) 사회정치사상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질을 매개하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에서는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 정치사상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치사상교육에서도 이념교육은 핵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구동독은 모든 국민의 능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sup>41</sup>이 국가적 과제라는 명목 아래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을 강조하였다. 사회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관, 인격, 도덕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체 사회가 사회주의화되고,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교육개념에서는 이념교육과 사회주의적 의식과 행동의 개발이 사회주의 인격의 핵심 가치로 간주된다.”<sup>42</sup>

통일 전 동독의 교육은 공산당이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1967년 4월 17

<sup>41</sup>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p.20.

<sup>42</sup> G. Neuner(1973).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35f.

일부 22일까지 개최되었던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교육에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독의회는 1970년 9월 16일 '성인교육기관이 사회주의체제에 기여해야 할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사회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인교육기관의 목적은 다면적으로 계발된 사회주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식을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소유하고, 동독사회주의 사회와 경제의 특징을 잘 알고, 현대 기술과 생산관계를 잘 이해하여, 사회주의 국가·경제·문화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경제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조국인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수호하는 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다."<sup>43</sup>

## (2)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사회교육을 수행하였던 모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처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었다. 모든 주요 교육기관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인대학, 기업체 부설대학<sup>44</sup> 등이 대표적인 사회정치사상교육기관이었고, 동시에 각종 강연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5</sup>

<sup>43</sup>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die Grundsätze für die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i der Gestaltung des entwickelten gesellschaftlichen Systems des Sozialismus in der DDR vom 16. Sept. 1970, p.200.

<sup>44</sup> 북한의 공장대학과 유사한 성인 고등교육기관이다.

<sup>45</sup> J. Olbrich(2001).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p.289.

표 1-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사회정치사상 교육기관	성인대학
		기업체 부설대학
		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비형식 사회정치사상교육	각종 강연회
		문화행사, 문화관, 도서관, 대중매체 등

### (3)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 배경 요인이 되는 사회교육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통일 전 동독 사회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독이 소련점령지였을 때 성인교육의 최대 목적은 정치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에 놓여 있었다<sup>46</sup>. 정치사상교육이란 여기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교육이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동독국가가 건설된 이후 사회교육에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자질 함양이 주요 과제로 추가되었다. 1948년 제1차 경제계획이 선포되면서 직업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듯이, 1950-1951년부터 기업체 부설대학이 건립되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성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 6월 ‘학문적 인식을 준비하는 사회’라는 헌장이 선포되면서, 사회교육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기존의 이념교육, 직업교육과 더불어 일반 교양의 함양이 사회교육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동독 사회교육의 세 가지 과제, 즉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 동독사회에

.....

<sup>46</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66ff.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sup>47</sup>.

통일 전 동독의 교육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비록, 사회교육이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이념교육이었다. 따라서 이념교육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역시 이념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점에서 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과 사회정치사상교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의 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체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만 가르쳤다. “성인대학의 과제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인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어, 반파시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sup>48</sup>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주의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일반 성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인대학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통로이다. 성인대학은 정치, 과학, 기술, 예술 등 제 분야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의식을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49</sup>

#### (4)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내용

통일 전 동독에서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

<sup>47</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16.

<sup>48</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p.80.

<sup>49</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p.80.

이념교육, 마르크스-레닌주의 가치관교육, 반혁명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가치관과의 논쟁,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특징과 우월성 인식, 제국주의적인 서방세계와의 정치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과 논증능력 등이었다<sup>50</sup>.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전 라이프치히(Leipzig)에 있었던 성인교육연구소(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an der Universität Leipzig)<sup>51</sup>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sup>52</sup>. 1968년 라이프치히 성인교육연구소에는 약 9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전공, 부전공, 추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교육과정이었다. 부전공교육과정에는 정치경제, 철학, 역사, 과학적 사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교과목이 중심을 이루었다. 추가교육과정 가운데 중요한 교과목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경제적 기초, 소련교육학, 성인교육심리학, 개별 교과목의 교수학 등이었다. 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교과목이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교과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동독에서 사회정치사상교육이 교육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주로 이념교육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사회정치사상교육의 특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sup>53</sup>. ‘다면적으로 도야

<sup>50</sup> H. Klein(1974). Bildung in der DDR-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p.32.

<sup>51</sup> 1948년에 설치된 위 연구소는 동독의 대학에 설치된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성인 교육기관으로 주로 교장, 장학사, 대학강사 등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sup>52</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35.

<sup>53</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17.

된 사회주의 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 육성을 완성하는 것이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이었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유일한 과학적인 철학으로 인정되고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졌다. 더불어 사회과학(역사, 마르크스 사회이론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교육의 주요 분야인 교양교육이나 직업교육 역시 마르크스 교육학이 기초 학문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 성인들에게 필요한 대화나 토론 방법 보다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교화(Indoktrination)가 강조되었다. 성인 학생들은 수업활동에서 피동적으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넷째로, 사회정치사상교육기관은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점은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체계에 관한 법'<sup>54</sup>이 뒷받침하였다.

### 3.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비교

#### 1) 학교정치교육 비교

##### (1) 정치교육(통일교육) 정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행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동방정책 이전에는 서독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동방정책 이후에는 동독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매개하고, 양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평화와 민주, 자결의 이념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독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sup>54</sup>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반면,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기본 정책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그 이념의 현 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 (2)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

서독 학교정치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동독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내용

서독에서 정치교육의 내용은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비교,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반면, 동독에서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르쳤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비교,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토론 수업이 강조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화(In-doktrination)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비록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방법으로서 논쟁과 증명 등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하는 것에 모아졌다.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판단과 입장을 강조하였던 서독의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중 인격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과, 내면적인 진실된 생각이 서로 다른 이중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표 1-3) 통일 전 동서독 학교정치(사상)교육 비교

	서독	동독
정치교육의 목적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 고취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올바른 통일 가치관 형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주입 사회주의 시민으로 육성 사회주의 혁명 과업 완성
정치교육의 내용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국제정세 소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강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정치교육의 방법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토론수업 비교/체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교화

### 2) 사회정치교육 비교

#### (1)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

고, 동독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에 모아졌다.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가르치는 데 정치사상교육의 대부분이 할애되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대립과 투쟁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과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 (2)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내용

정치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서독에서는 동독체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 동서독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 등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일반 성인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등 사회주의 이념을 주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서독과 관련해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주로 가르쳤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정치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주요 교육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성인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교육을 받았고, 그 효과도 컸다.

반면, 동독에서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식을 주입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이념은 토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정치교육에 임하였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 담당기관

서독에서는 정치교육 담당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센터와 11

개 주정치교육센터,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 등이 있었고, 정당 재단, 그리고 교회,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국가와 민간이 모두 정치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회정치교육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독에서는 모든 사회교육은 국가가 관장하였다. 동독의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관장한 것과 같이 사회정치교육 역시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표 1-4) 통일 전 동서독 사회정치(사상)교육 비교

	서독	동독
정치교육의 목적	민주소양 고취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올바른 통일외식과 통일외지 함양	사회주의 이념 주입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강조
정치교육의 내용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국제관계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사회주의 이념
정치교육의 방법	강의와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	지식의 주입과 교화
정치교육 기관	정치교육센터 정당 재단 민간단체	국가가 관장 민간 배제

## 제2절 독일통합과 통일 후 정치교육

독일통일 직후 정치교육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 주민의 재사회화와 내적 통합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독일 통일정부는 서독의 정치교육 시스템이 서독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정치교육 시스템을 동독에 도입할 경우 비슷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서독식 정치교육을 동독에서 실시하였다. 즉,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동독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

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 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통일정부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정치교육에서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이후에는 독일통일 문제가 심리적 갈등과 대립 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다.

## 1. 학교정치교육 분야 통합

독일통일은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주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서독과 통일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형태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기존 동독의 제도는 사라지고, 서독식 제도가 동독에 확장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치교육 분야에서는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독식 정치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정치교육 분야의 통합이란 서독식의 정치교육이 동독지역의 학교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 1) 학교정치교육 개요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모든 주에서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구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와 이념교육은 폐지되었다. 구동독지역의 각 주(신연방주)는 고유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주에서 만든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정치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과서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의 정치교육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

## 2) 학교정치교육 목적

독일에서는 교육의 권한이 주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역시 주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적인 주를 선택하여 살펴보면, 통일 후의 구동독지역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동독지역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사례로 정치교육이 통일 후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sup>55</sup>. 브란덴부르크주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6개 주를 선도하는 주로서 인정받고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인 의견 형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관용, 책임성, 비판능력,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념적인 교화를 배제한다.
- 정치교육은 단순한 민주사회에 대한 지식전달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원칙, 인권, 계몽 이념을 지향한다.

<sup>55</sup>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1994).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 정치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고, 사물 관련 지식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과정이다. 지식과 인식의 전수는 한편으로는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 협동, 결속력, 갈등해결 등의 사회적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이다.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의 함양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 요소이다.

정치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즉, 정치교육은 한마디로 ‘정치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치역량에는 지식, 능력, 자질, 가치, 태도, 통찰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치역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지배관계의 의미, 목적, 필요성, 강요 등을 묻고, 그 안에 숨겨진 이해와 규범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지배관계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묻고, 이해하고, 이용하고, 만들어 가는 능력과 의지
- 대화와 의사소통이 민주사회, 민주정치, 민주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아는 것

- 정치적인 대안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해결하고, 상이한 집단에서 함께 일하고, 그와 관계되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능력과 자세
- 자아실현, 자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회적인 책임 아래서 계획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이해를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해를 인식하고 때로는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 능력과 의지
- 다른 사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는 능력과 자세
- 개인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능력과 자세
- 노동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립근거요 자아실현과 정치적인 참여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직업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참여하려는 자세와 능력

### 3) 학교정치교육의 내용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의 학습영역은 4가지로 구성된다: 사회-경제-민주주의-국제사회. 이 네 가지 영역은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조직체계가 된다. 위 네 영역은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아래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위와 같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기본계획안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5)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학년	사회	경제	민주주의	국제사회
7/8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집단</li> <li>•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li> <li>• 오씨스-베씨스</li> <li>• 여가 이용</li> <li>• 중독의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와 광고</li> <li>• 소비행태</li> <li>• 일자리와 실직</li> <li>• 사회보장제도</li> <li>• 노동단체</li> <li>• 독일통일의 경제적 결과</li> <li>• 교통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종과 참여 사이의 학교</li> <li>• 법치국가의 특징</li> <li>•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li> <li>• 구동독체제의 목표와 현실</li> <li>• 의회민주주의제도</li> <li>• 시민과 대중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 저개발의 문제점</li> <li>• 자연의 착취</li> <li>•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 협력의 필요성</li> <li>• 유럽통합의 문제</li> </ul>
9/10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선택</li> <li>• 공동체적 삶</li> <li>• 중독과 미약</li> <li>• 구동독의 구조변혁</li> <li>• 인권으로서의 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li> <li>• 동독 경제적 변혁의 문제점</li> <li>• 사회적 시장경제</li> <li>• 노동시장</li> <li>• 직업세계에서의 이해관계와 갈등</li> <li>• 생태적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의 갈등</li> <li>• 정치선거</li> <li>• 극단주의와 폭력</li> <li>• 통일 이후 시민운동의 역할</li> <li>• 대중매체의 영향</li> <li>• 국가적 권력구조의 형태와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장 정책</li> <li>• 유럽통합과정의 문제점</li> <li>•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가능성과 난점</li> <li>• 부국과 빈국 사이 문제의 상호관련성</li> </ul>
11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화</li> <li>• 외국인적대감과 극우주의</li> <li>• 청소년 범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소비행태</li> <li>•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일자리</li> <li>• 브란덴부르크주 산업화와 구조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권력으로서 대중매체</li> <li>• 민주주의 모델 비교</li> <li>• 미래의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의 변증법</li> <li>•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li> <li>• 종교</li> </ul>
12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li> <li>• 교육제도와 기회균등</li> <li>• 소수민족의 존립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경제정책</li> <li>• 선진산업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li> <li>• 석탄과 기타 에너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참여와 시민운동</li> <li>•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li> <li>• 통일조약과 그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대결의 종료와 국가주의 추세의 강화</li> <li>• 제3세계</li> <li>• 세계문제 해결에서 첨단기술의 역할</li> </ul>
13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정책</li> <li>• 나치시대의 인종정책</li> <li>•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여성노동자의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경제정책과 경제이론</li> <li>• 20세기 경제발전과 과학</li> <li>• 개인과 국가의 경제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시즘과 사회주의 비교</li> <li>• 바이마르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비교</li> <li>• 1945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바위기와 냉전</li> <li>• 동유럽의 역사와 후기사회주의의 미래</li> <li>• 아프리카의 역사</li> </ul>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의 기본 형태가 도입되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육 전반에 걸쳐 서독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점은 정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정치교육은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구동독에서 행해졌던 이데올로기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다. 둘째,



정치교육의 목적을 민주적 사고와 태도의 형성에 두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통일 이후의 문제점, 예를 들어, 동서독 간의 차이, 동독지역의 상황 등의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통합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통일 직후 사회문제가 되었던 동서독의 의식의 갈등과 구동독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그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결여와 적절한 대책의 부재는 결국 통일 후 오랫동안 의식 통합 문제 등 통일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4) 정치교육 담당 교원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서독식의 교육제도와 함께 교원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독식의 교원임용제도는 다단계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원 지망생들은 4-5년 간의 대학학업을 마치면, 1차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고, 그것에 합격하면 2년 간의 교원연수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되면 2차 교원임용고사를 치러 최종 합격하면 교원으로 발령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교원지망생이 교원이 되려면 최소한 7-8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정치교육과 같이 이념적인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새로운 교원임용제도에 따라 교육과 연수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구동독 시절 ‘국가시민’ 교과는 서독식의 ‘정치교육’ 교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학생들은 ‘국가시민’ 교과 담당 교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 양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정치교육’ 교과는 1991-1992년에는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서, 1992-1993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상급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치교육’ 교과를 가르칠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사부족,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자질 부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실행되었다. 첫째, ‘정치교육’ 교과 교사는 처음에 모두 타 전공 교사들에 의해 잠정적인 수업 허가 아래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교사들은 성격상 이념시비를 받는 주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일부는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연구소에서 3년 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셋째, 일부 교사들은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aet in Berlin)에서 2년 간의 별도 교육을 받았다. 넷째, 또 다른 부류의 교사들은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연구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교사 재교육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물론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구동독의 이념교육에 질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교육인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사들 조차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념교육과 같이 가치가 개입된 교과를 교사들이 신념을 갖고 가르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학교정치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역시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이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통합되었다. 정치교육이 통합되었다



기 보다는 서독식의 정치교육에 편입된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 1) 사회정치교육 개요

통일 직후 독일의 사회정치교육에서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서독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통일독일 정부는 구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통일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교육의 주요 방향은 구동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모아졌다<sup>56</sup>.

통일독일 정부와 정치교육담당자들은 과거 서독에서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구동독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구동독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대 하에 통일 이전 구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들이 구동독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동독지역의 각 주에 정치교육센터가 설치되었다. 정당의 정치교육재단과 교회 등 사설 정치교육기관도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사회정치교육은 학교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의 사회정치교육기관이 모두 해체되었고,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정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

.....  
<sup>56</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125.

다. 통일 이전에는 주입식 정치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통일 이후에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다.

주로 서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동독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단지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독일정부는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1년 말 통일 전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센터에 이관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1993년 이후 동서독국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내적 통합(Innere Einheit)’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고, 동서독주민 간의 심리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그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는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sup>57</sup>. 통일 이후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 중점 추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sup>57</su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0-1999, Bonn.



### (1) 1990년

통일된 해인 1990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구서독의 정치 교육을 동독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sup>58</sup>. 동독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체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정치교육을 통하여 도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기존에 해오던 정치 교육용 간행물 발간사업을 확대하여 동독주민들도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9년 가을의 동독 시민혁명 사건을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아직 통일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 (2) 1991년

1991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중심 테마는 신연방국가(구동독지역)와 통일이었다<sup>59</sup>. 독일통일이 대단히 신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1991년에 와서야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1991년부터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이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과제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1991년에는 신연방지역(구동독지역)에 세워진 주정치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1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이론/정치교육,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 (3) 1992년

1992년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주제는 동독과 통일이었다<sup>60</sup>. 그러나 1992년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도전을 맞게 된다. 통일휴유증으

.....  
<sup>58</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0, Bonn, 1991, p.5.  
<sup>59</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1, Bonn, 1992, p.5.  
<sup>60</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2, Bonn, 1993, pp.5-6.

로 인하여 동독과 서독주민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별히 급속히 성장한 폭력적 경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정치교육에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배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92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 (4) 1993년

1993년 연방정치교육센터 사업의 핵심 주제는 극우주의와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다원화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sup>61</sup>. 이를 위해 특별히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구동독(신연방주)지역에 정치교육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1993년부터 동서독국민의 심리적 통합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어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졌다. 1993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 (5) 1994년

1994년에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sup>62</sup>. 이를 위해 극우주의 및 폭력과 대항하여 정치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특별히 구동독 전체주의체제를 정치교육의 주제로 다루었다. 더불어 구동독지역 정치교육 교사들의 재교육과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4

<sup>61</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3, Bonn, 1994, p.5.

<sup>62</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4, Bonn, 1995, p.5.



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 (6) 1995년

1995년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1992년 이후 독일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sup>63</sup>. 특별히 통일 5주년을 맞이하여 동서독주민 간의 갈등과 심리적 통합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며, 관용과 이해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향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sup>64</sup>. 1995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 (7) 1996년

1996년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과제는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sup>65</sup>. 동서독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1996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sup>63</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5, Bonn, 1996, p.7.

<sup>64</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5, Bonn, 1996, p.74.

<sup>65</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6, Bonn, 1997, p.7.

### (8) 1997년

1997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은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sup>66</sup>. 1997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새로운 독일 국가의 탄생, 2) 심리적 통합, 3)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4) 환경문제, 5) 개발도상국가, 6)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 (9) 1998년

1998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역시 1997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sup>67</sup>. 1998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 (10) 1999년

1999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는,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가능성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모색하려 하였다. 둘째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sup>68</sup>.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9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

<sup>66</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7, Bonn, 1998, p.101.

<sup>67</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p.124.

<sup>68</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pp.8-9.

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사회, 4) 경제, 5) 독일 역사, 6) 유럽, 7)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5) 학문과 사회의 미래 등이었다.

표 1-6)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 주요 사업(1990-1999년)

연도	주된 관심사	주요 테마
1990	• 독일통일	• 1989년의 시민혁명
1991	• 신연방국가(구동독지역)와 통일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정치이론/정치교육, 미래사회
1992	• 동독과 통일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정치이론/정치교육, 미래사회
1993	• 극우주의와 폭력, 평화적인 공존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4	• 독일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5	•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 심리적 통합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전시회
1996	• 동서독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전시회
1997	•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새로운 독일 국가의 탄생,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개발도상국가,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1998	•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1999	•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학문과 사회의 미래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추진한 정치교육 사업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 통일 직후에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동독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 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이후에는 독일통일 문제가 심리적 갈등과 대립 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다.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정치교육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다. 둘째, 내용적으로 볼 때, 통일 후 사회정치교육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동독의 공산주의체제, 동서독의 역사,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구동독 공산주의체제 아래서의 생활, 심리적 통합 등 통일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졌다. 이 점은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과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방법적으로 볼 때,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후 사회정치교육을 이전에 정치교육에서 활용하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였다. 간행물, 연수, 대회, 시청각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 3. 통일 후 독일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통일 이후에는 정치교육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더불어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재사회화되고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여기서는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이 이러한 과제들을 적절히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겠다.

#### 1) 학교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1989년 구동독의 붕괴는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법치국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



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정치적 구조는 해체되었고, 경제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여러 사회적인 제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불어 독일과 유럽의 통합과정, 소련의 붕괴, 전세계에서의 독립운동 등 국제정치적인 변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의 빠른 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적응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동독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특히 구동독 청소년들은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이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 혼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부모나 교사 등 기성세대 역시 가치 혼란과 방향 상실 등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뒤바뀐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뒤바뀌었다. 이제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교육 내용에서는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이 문제였다. 통일은 서독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이전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동독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부정 및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동독 국가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동독지역 학생들은 구동독 시절 국가가 주입하는 정치사상교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는 데 정치교육이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주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의 정치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sup>69</sup>. 통일 전 동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동독인들이 사회주의

<sup>69</sup>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 배영사, pp.101-102.



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서독인들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동서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치교육은 기대한 결과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통일 초기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구동독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좌절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1993년 드레스덴(구동독지역 소재) 공과대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2.3%의 대학생들이 구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PDS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회귀현상은 열등학생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찬성하지만, 40-60%에 달하는 상당수의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동독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조사되었다<sup>70</sup>.

셋째, 구동독 청소년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으로 인한

.....  
<sup>70</sup>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p.4. 이러한 구동독에 대한 향수는 오스탈기에(Ostalgie)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구동독에 대한 향수가 한때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을 낳았다.

폭력성은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51.9%의 동독 청소년들이 폭력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sup>71</sup>. 구동독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로 향하였다. 1992년에는 단지 2.2%만이 외국인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반면, 1993년에는 외국인 적대감이 훨씬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성과 외국인 적대감정은 극우주의 성향의 표현이다. 비록 조직적이거나 이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극우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나치시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동독에서는 민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가치 혼란의 시대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통일 직후 대부분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분명 적응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방향상실감, 행동의 불안정, 적대감, 편견, 공격성과 폭력 등으로 부적응이 표출되었다. 특별히 대량실직 등 통일 휴유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1992-1993년은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등 수많은 부정적인 양상이 강하게 표출된 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비교적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구동독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은 눈에 띈다. 1993년 독일의 주간지 디차이트(Die Zeit)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이하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새로운 제도への 적응과 학습 속도가 빠르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독주민들과 동화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체제에

<sup>71</sup> L. Böhnisch, u.a.(1992). Gesellschaftsstudie, Dresden, p.27.

<sup>72</sup>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p.242.



동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 여성, 실업자 및 조기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바이어(Beyer)의 조사에서도 구동독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75%의 청소년들이 문제가 거의 없다고 대답하였고, 20%만이 서독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를 해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약 20%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다<sup>73</sup>.

높은 실업률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극우주의 같은 현상들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 점은 구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점차 잘 적응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특별히 이 점은 구동독의 학생들이 구서독의 학생들보다 폭력적이고, 외국인에 적대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은 변혁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듯이, 1992년에는 약 42%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반면, 1992년에는 17%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8%로 증가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호적이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접촉도 1992년 20%에서 1994년에는 38%로 높아졌다. 더불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도 1992년 17%에서 1994년에는 12%로 감소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점차 다양한 의견을 소유하게 되었다.

.....  
<sup>73</sup> H.-J. Beyer(19906).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p.35.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통일 10년이 지난 후 동서독 청소년들의 삶의 형태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4</sup>. 정치적인 성향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겉으로 볼 때, 동독 청소년들은 새로운 통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황과 의식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독식의 체제에 대한 믿음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동독지역에서는 극우주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폭력 현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극우주의 성향의 청소년들의 폭력은 통일 10년이 지난 즈음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sup>75</sup>.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의 주요 원인은 구동독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통일 후 동독지역의 사회적인 환경,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6</sup>. 극우주의는 통일에 대한 실망, 자신 또는 부모가 처한 실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미래사회의 새롭고 높은 성취 요구,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등 개인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일자리, 집, 가정 등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생활조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sup>77</sup>. 청소년들은 자

.....

<sup>74</sup> H.-J. Veen(1999). Juge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ihr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im Vereinigungsprozeß, Deutscher Bundestag(Hrsg.),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d.III/3, Baden-Baden, pp.2394-2448.

<sup>75</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162.

<sup>76</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p.163-164.

<sup>77</sup> Die Welt vom 19.4.2000.



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교사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매년 약 80,000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sup>78</sup>. 통일 10년 후 많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스스로 통일독일의 ‘2등 시민’으로 평가하였다<sup>79</sup>. 구동독지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점차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 핵심 지지세력이 청소년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구동독지역의 많은 청소년들 역시 부모세대와 함께 통일 10년이 지난 후에도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구동독이 붕괴된 직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만약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신속히 전개되면서, 구동독의 교육정책가들은 시간을 두고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서독식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데 급급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통일이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일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구동독지역의 학교정치교육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 2) 사회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통일 이후 사회정치교육은 서독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일 이후 서독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 전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

<sup>78</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170.

<sup>79</sup> P. Förster(1999). Die 25jährigen auf dem langen Weg in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3-44, pp.20-31.

에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즉, 동독식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에서 서독식의 다원화된 민주주의체제를 익히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도 큰 문화충격을 주었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통일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도 단지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시키면 서독주민들처럼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치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정치교육센터 등 여러 정치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세우고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동독에도 서독식의 정치교육기관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독의 제도를 이식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동서독주민들 간의 심리적 장벽이 정치교육과 통합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후 독일국민의 정치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획득 수준, 정치적인 입장, 정치참여 행위면에서 서독지역 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의도하였던 동서독의 균형은 찾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참여, 선거참여율 등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당이나 노조에 대한 참여도 낮고,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행위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던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형성은 통일 10년이 지난 후 거의 상실되었다. 구동독 시절 정치이



데올로기에 희의를 품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정치 이해와 풍토가 구동독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

구동독주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된 원인은 구동독 정치문화의 영향, 통일의 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특별히 세 가지 점은 언급할 만하다. 첫째는, 통일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식이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통일사회가 분명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2등 국민’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열등감이다. 구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경제 지원을 건강한 통일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기 보다는 난민 구호금이나 자선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무력감이다. 자신들이 통일독일을 가꾸어 가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통일 이후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점은 구조적인 측면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동독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면서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안목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동독인의 눈에는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서독식의 정치문화를 매개하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동독지역 정치문화의 문제점이 동서독의 불균형적인 의식의 문제인 동시에 서독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는 능력이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결여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역량의 결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결과로 가져왔다. 구동독지역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구동독 공산당의 후예정당인 독일사회

당(PDS)이 대약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999년 베를린주 선거에서 독일사회당(PDS)은 전체적으로는 17.7%로 기민당과 사민당 다음인 제3정당을 차지하였고, 동베를린지역에서는 39.5%로 제1당을 차지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과 1995년의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대약진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베를린은 구서독 정당을, 동베를린은 구동독 정당을 택하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sup>80</sup>. 또 하나의 사례로 극우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극우주의 정당의 당수인 하이더(Haider) 논쟁에 대한 2000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하이더와 같은 인물이 독일 정치계에도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주민 가운데 15%가, 서독주민 가운데 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독일국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극우주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주민 가운데 19%가, 서독주민 가운데 1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sup>81</sup>. 중도적인 정당보다는 극좌와 극우정당 모두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높다는 사실은 모순되면서도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후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구동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서독식의 정치교육 모델이 그대로 수용되어 전개되었다. 서독의 모델에 따라 신연방 각 주에 주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정치교육 담당부서가 동독지역에도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교회 등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그대로 구동독지역에 적용하면 정치교육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였다. 곧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sup>82</sup>.

첫째, 정치교육을 위한 재정이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재정이 고갈되었

<sup>80</sup>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2000). Berliner Statistik, 2000, pp.20-22.

<sup>81</sup> E. Crome, B. Muszynski(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sup>82</sup> E. Crome, B. Muszynski(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을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정치교육 장소나 시설도 낡아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둘째, 정치교육 기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동독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의식과 열성과 노력이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서독식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결여는 수요자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참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무관심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넷째, 정치교육 수요자들의 무관심은 공급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질적으로 매력 있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의 개발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정치교육 담당자인 강사의 질적인 결여를 가져왔다. 그들은 정치교육 계획이나 정치교육 교수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정치적인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동독지역은 통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결속력 있는 단체와 모임이 미약해져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에서처럼 정치교육 단체에 대한 후원이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섯째, 실천적인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읍·면·동 등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만개되어야 하는데, 구동독지역에서는 아직도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정치조종에 익숙해져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동독이 붕괴할 때 시민연합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탁회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로 인정되는 시민사무실, 미래설계실 등 시민참여는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었다.

통일 20년 후에도 동서독의 사회통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을뿐 아니

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독주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2등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독정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연됨으로써 통일 20년 후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동독에 대한 향수’라는 뜻을 지닌 오스탈기(Ostalgie)<sup>83</sup>란 말이 독일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독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2005년 서독주민들의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독주민들은 3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84</sup>. 독일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구동독주민들은 1990년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22%로 낮아졌다.

2009년 독일 알렌스바흐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지역 주민의 63%가 서독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느낀다고 응답하였다<sup>85</sup>. 2008년 실시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22%만이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응답하였다<sup>86</sup>. 삶에 대한 만족도는 1990년에는 5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42%가 독일 전체 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갖고 있고, 52%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나 하급노동자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46%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9%의 동독국민들은 자신들을 서독주민들에 비해 2등 국민으로 여기

<sup>83</sup> 향수라는 독일어 Nostalgie와 동쪽이라는 독일어 Ost를 합성한 단어로 동쪽에 대한 향수, 즉 구 동독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음.

<sup>84</sup> 정병기(2010). 독일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 진보평론, 제46호 (2010년 겨울).

<sup>85</sup> B. Seliger(2009). 독일통일 20년-정치·사회·경제적 결산.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p.46.

<sup>86</sup>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p.66.

고 있고, 73%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7</sup>.

최근 구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Die Linke가 구동독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무실업, 탄탄한 사회보장제도 등 구동독 사회주의 사회의 장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서독인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상처, 새로운 사회에의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동독에 대한 향수(Ostalgie 현상)가 구공산당의 지지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표 1-7) 동서독주민의 정당 지지율

(단위 : %)

	1990		2009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기민당(CDU/CSU)	44.3	41.8	34.6	29.8
사민당(SPD)	35.7	24.3	24.1	17.9
자유당(FDP)	10.6	12.9	15.4	10.6
좌파당(Die Linke)	0.3	11.1	8.3	28.5
녹색당(Gruene)	4.8	6.2	11.5	6.8
기타	4.3	3.7	5.9	6.3

\*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종합적으로 볼 때,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행태는 분명 통일정부가 기대하였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지만, 통일 후유증과 결부되면서 정치교육의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sup>87</sup>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p.74.

##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

###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 1. 정치교육 관련 연구

##### 1) 배경

동서독과 남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분단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열망한 측면도 유사하다. 통일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노력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나,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또는 통일교육)은 일찍부터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정치교육이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그 내용상 정치교육, 경제교육, 법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연구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에서는 ‘사



회' 교과 안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법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정치교육이 주목을 받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연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초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영웅, 1982; 전득주 외, 1992, 2000; 허영식, 1996; 전득주·페터마상·허영식 편, 2006). 독일에서 유학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점은, 그들의 정치교육이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내용적으로 유실하게 운영되었고, 또 그 효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역할에 힘입어 민주시민 양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치교육이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안에 통일교육 요소가 포함된 점, 정치교육이 통일준비에 기여한 점,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합에 기여한 점이 주목 받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전득주 외, 1995; 황병덕, 1995; 김창환 외, 2001, 2002).

## 2) 연구물 현황

지금까지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연구하였다(김영웅, 1982; 전득주 외, 1992, 2000; 허영식, 1996; 전득주·페터마상·허영식 편, 2006).

시기적으로 보면 통일 전에 실시되었던 정치교육과 통일 이후에 실시된 정치교육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서독의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일통일 전후 정치교육 연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김주성, 1994; 김경모 외 2002; 이규영, 2005; 원준호 외, 2014)의 관점과 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교육(마석한, 1999; 이병련, 1999, 2000; 김상무, 2005, 2009, 2010, 2011, 2013; 김기봉, 2014)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사회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교육 연구는 주로 정치교육 기관들과 그 활동을 소개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김창환, 2001, 2002; Ruminski, 2012).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독일 사회정치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정치교육 연구에 비하여 연구물이 적은 편이다.

### 3) 연구 주제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독일 정치교육을 소개한 연구물이 가장 많다. 독일의 학교 및 사회 정치교육 제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연구들이다(박순영, 1982; 허영식, 1994, 1996a, 1996b; 박병석, 1996, 2004; 황병덕, 1997; 김영국, 1997; 윤재연, 1998; 김창환, 2001; 신두철, 2005; 임춘희, 2012). 둘째,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가 다음으로 많다. 서독과 남한의 정치교육을 비교하거나, 동서독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대부분은 서독과 남한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이다(김미경, 2009). 셋째, 독일 정치교육이 한국 정치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구승희,



1996; 박광기, 2010).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일 정치교육이 모범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 4) 연구의 특징

한국에서 진행된 독일 정치교육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다보니, 의미 분석, 심층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는 많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 독일 정치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치교육 실시 방안(목적, 내용, 방법, 대상, 주체 등)에 대한 심층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의 방향성 또는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었으나,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단순 시사점을 넘어서 한국적 상황을 깊이 고려한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 2. 통일교육 관련 연구

### 1) 배경

정치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국가 정책에서 언제나 우선 순위였고,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한 분단국가였고, 우리와 비슷하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교육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나는 통일 이전의 통일준비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통일대비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통일 후 사회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점을 주목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독일은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치교육 안에서 동서독국민이 한 민족이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지침과 통일교육 내용 등이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가 추진되었다(한만길 외, 1998; 김창환 외, 2002; 김상무, 2005; 강구섭, 2016).

독일통일은 한국의 통일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통일 이후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물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내적통합 문제가 통일독일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연구물들이 급증하였다.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연구물들도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 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남한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통일 이후 한국사회에서 맞게 될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2) 연구물 현황

통일 이전 실시된 서독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연구물 자체가 많지 않다. 진행된 연구물도 주로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통일교육 부분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은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은 분야이다. 그러나 통일교육 연구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연구물 자체가 많지 않다. 사회통합을 사회적 이슈로 파악하고 교육적 이슈로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일부 연구에서 주목받았을 뿐이다(한만길 외, 1998; 신혜진, 1999, 정영수 외, 1999).

### 3) 연구 주제

통일교육 관련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소개한 연구들이다. 주로 사회과 교육에서 실시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차원의 연구물이다(한국국토통일원, 1978; 이규영, 1997; 김창환 외, 2002; 김상무, 2005, 2009, 2010, 2011, 2013). 둘째,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서독과 남한의 통일교육을 비교하거나, 동서독의 통일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박형영, 1982; 고숙희, 1999; 박봉정, 2002; 정용길, 2003; 김상무, 2005). 셋째, 독일 통일교육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박기석, 1998; 정상돈, 2000). 넷째, 더 나아가 한국 통일교육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추진되었다(최현호, 1999; 신혜진, 1999; 김종남/채정민, 2008; 박광기, 2010).

### 4) 연구의 특징

한국의 통일연구는 기본적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 이전에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이 역시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일 이후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드물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나, 남북통일 이후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 이후 정치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으나, 과제도 발견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통일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은 미래적 사건이다.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방향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연구하면서 바람직한 통일미래사회를 구상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 이전도 중요하나,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통일준비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면, 앞으로는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모델 개발 연구, 통일 청사진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연구와 액션 플랜 연구 등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의 구체적 모습으로 주목 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사회통합교육 연구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독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분단과 통일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모델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가 분야별, 시기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통합이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진행된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향후 남북이 통일될 때 매우 요긴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 후 북한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계획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강사, 관리 기관 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남북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통일이 제도적인 통일인 동시에 사람의 통합으로 볼 때, 사람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람의 통합은 생각, 가치관, 세계관, 삶의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합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역량에 관한 연구도 주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북한이탈 주민 연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통일을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분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여기서는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제1절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겪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독일통일이 예기치 않게 온 것과 같이 남북통일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통일 후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잠정조치, 증장기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후 북한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동독지역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

다.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작업이 대단히 큰 도전이요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70년 이상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공산주의체제에서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구동독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고, 북한이탈 주민도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적 재사회화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 북한주민의식의 개조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 점을 간과하여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후 정치교육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 목표, 내용, 방법, 교강사, 인프라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분야별 액션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강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 퇴직 교원, 북한이탈 주민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통일 후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독일 이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교육도 중요하나, 남한주민의 통합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통일은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후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한주민의 민주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 받고 성장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궁핍 속

에서 피해해진 북한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연대감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남한주민들이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수용,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통일인성 형성,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 등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통해 함양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독일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고찰하였다. 동서독의 통일 전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의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일을 보는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과 통일 이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통일을 보는 관점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나, 상이한 의식과 문화를 통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 점은 독일통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할 필



요가 있다.

첫째, 통일을 제도적인 통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일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상이한 체제(제도, 문화)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통일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영토와 제도가 통합되는 것이다. 정치제도, 경제제도, 국방제도 등 사회 전 분야의 상이한 제도가 하나로 통일(unification)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물리적인 통합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영역은, 사람의 의식과 문화가 통합되는 것이다. 이념, 가치관, 관습, 문화 등이 통합(integration)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화학적인 통합이라고 부른다.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물리적인 통합을 생각한다. 하나의 영토, 하나의 군대, 하나의 정치제도, 하나의 경제제도를 갖게 되면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일을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이 통합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통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은 제도의 통일인 동시에 사람의 통합이다. 사회적 통합이란 남북한주민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이질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 통일문제의 정치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정치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의 개념	통일(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통일에 대한 이해	목표(goal)	과정(process)
주 영역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주 관심사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합
통일 역량(추동체)	hard power	soft power
통일 미래상	통일국가	복지국가(삶의 질, 사회의 질)
통일교육 목표	통일역량	통합역량(문화역량, 사회역량, 시민역량)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 북한교육	평화교육, 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	정부	민간(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

둘째, 통일을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통합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통일은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유출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의 통일 준비교육, 통일의 진행과정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단된 남북한 사회의 궁극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은 외형적,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둘로 갈라져 있는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일, 실질적 융합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서로 달라져 있는 남북한주민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현대 한국사 인식, 분단현실 인식, 통일의 당위성 인식 등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셋째, 남북한 사회통합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내적 통합 문제가 장기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남북한도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회통합이 통일 이후 정치교육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 2. 통일 이전부터 준비할 사항

###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가치관과 평화로운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독의 이러한 정치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대비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준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상호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문화의 정착은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그 안에 원천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2) 평화교육

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 평화의 이념이 민주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정치교육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강조되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치교육의 내용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의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구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3) 민족공동체 함양 교육

통일 전 서독은 비록 두 개의 나라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서독은 양 독일인들이 공통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동독에 대한 사실적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동독인들 또한 강렬한 통일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서독 청년들 간의 연대감을 강조하였다. 이점은 통일 이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서독을 엮는 끈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천 년 동안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 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 동일민족이란 점은 남북 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묶는 중요한 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 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실현과 한민족 공동의 번영은 통일한국의 1차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수업방식은 ‘이질화의 사례집’ 수준을 뛰어 넘어 동질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 공동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의 동질화 또는 균등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통합, 정신상태 또는 의식의 내적인 통일도 중요한 과제인 바, 민족적인 연대의식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하게 하는 데 남북의 동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 4) 남한주민과 학생의 통합역량 제고

통일 후 독일은 사회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통합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영토와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사회통

합, 사람과 의식 통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전쟁으로 남북 상호 간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되어 있고, 오랜 분단으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심리적 통합이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남한주민들의 포용능력과 갈등해결 능력도 미흡하여, 현재 남한 내 남남 갈등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주민 간의 이질감과 갈등, 반목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였을 때,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다. 모든 면에서 독일보다 험거운 상황이다. 동서독보다 남북 간의 분단기간이 더 길어 이질감이 더 크고,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러 적대감이 더 강하고,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남북 간 교류가 거의 없어서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남한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낮고, 경제규모 격차가 더 커서 우열관계가 더 크게 형성되고, 사회정의, 포용성, 신뢰성 등 각종 사회의 질 수준이 낮아 사회통합과 공존과 갈등해결 면에서 독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사회통합 관련 한국과 독일 비교

비교 항목	독일	한국	영향
분단기간	1945-1990년(45년)	1945-2016년(71년)	이질감
상호 전쟁 경험	X	O	적대감
정치체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	부적응
상호 교류	O	X(거의 없음)	상호 이해
사회보장제도	O	△	사회적 안정성
통일 전 경제격차 (1인당 GDP)	2배	20배 이상	우열관계 (열등감)
사회정의(2011)	OECD 14위	OECD 25위	사회통합
포용성(2011)	OECD 14위	OECD 28위	공존
신뢰성(2011)	OECD 15위	OECD 25위	갈등해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구조, 사회 양극화를 지양하고 복지를 갖춘 구조, 공평하게 보상하되 기득권층의 승자 독식을 막는 구조, 다양한 성공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 사회공동체의 신뢰가 높은 구조 등 선진화된 사회구조가 마련될 때 북한주민들을 새로운 통일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성장 모델 만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통일 후 사회통합을 이루기도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각종 사회적 지표는 OECD 국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표 1-10) 주요 사회지표

주요 사회지표 및 지수		미국	스웨덴	독일	한국	자료 출처
사회 지수	사회정의 지수	27	4	14	25	독일, 2011
	교육정의 지수	17	3	11	23	한국(KEDI, 2012)
사회 지표	사회적 신뢰도	22	3	19	21	OECD
	타인에 대한 신뢰도	21	4	15	25	OECD
	관용성 지수	9	11	14	28	OECD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 공동

체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을 배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 받고 성장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궁핍 속에서 피폐해진 북한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연대감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남한주민들이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교육에 적극 투자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OECD-PISA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초중등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각종 교육지표(교육의 기회, 수월성, 형평성 등)가 개선되고 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육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뛰어나나, 사회적 역량, 시민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협동력, 갈등해결능력 등 시민역량(공동체역량) 영역이 보통 또는 미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역량이 불충분한 수준인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학생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은 학업부적응, 생활부적응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많은 북한이탈 학생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 학교부적응을 심화시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중도에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남한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남한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포용역량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2016 통일교육지침서’를 살펴보면, 현행 통일교육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2)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4)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6)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sup>88</sup>.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1) 통일문제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 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등 다섯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 담겨져 있는 통일교육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이 통일준비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

.....  
<sup>88</sup>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pp.8-11.

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주로 지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강조되어 있으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무엇보다 역량을 키우는 관점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 통일교육은 통일 준비를 위한 지식과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역량을 키우는 것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을 사회문화적 통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준비교육뿐 아니라, 통합역량을 갖추는 교육도 중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남북 사회문화 통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통합이란 남북한주민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목표를 지식이나 체험과 더불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두는 것이다. 통일역량과 더불어 통합역량을 갖추도록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역량은 학생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통합역량을 갖추어 평화로운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일과 북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갈등극복교육, 상호이해교육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통합역량은 공동체역량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의 방법을 ‘지식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 만나서 겪어보면서 통합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

한 이주민, 특히 탈북 학생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은 매우 중요하다.

표 1-11 >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점	통일준비	통일 이후 사회문화 통합
목표	지식, 체험	지식, 체험, 역량
대상	학생중심	전 국민
내용	통일이해, 북한이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갈등극복교육, 상호이해교육
방법	지식중심	행위 중심

### 3. 통일 이후 강조할 사항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남북통일 이전에는 통일교육이 중요하지만, 남북통일 이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초로 통일 이후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통일한국의 미래 디자인

우리가 꿈꾸는 통일을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동서독통일은 독일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 통일은 독일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동서독통일은 독일에 게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동서독통일은 결과적으로 동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유럽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또한 동서독통일은 동서 유럽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은 남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갈등비용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막대하다.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은 인구 7,000만의 강대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이 2050년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89</sup>.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만 6,000 달러로서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sup>90</sup>. 통일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력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사회를 어떤 선진사회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미래 통일한국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통일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통일사회를 디자인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통일 이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향성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적인 사고와 행동을 매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통일교육)은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sup>89</sup>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21일 기사

<sup>90</sup>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11일 기사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회통합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이 정치교육(통일교육)의 핵심 주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주민 간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여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치교육(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드러나게 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해서 보충교육(숙제)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교육, 공산주의 가치관과 의식을 청산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 새로운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정치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은 남북한 국민의 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그 기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체제(공산주의 이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 필요한 최적의 기회를 제

공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민주적인 행동규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연습하고, 갈등해결능력과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발생할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들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인 선입견, 편견, 극단주의 등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통일 후 남북한주민들이 갖추어야 하는 민주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은 단순히 민주사회에 대한 지식만을 갖춘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더불어 경험, 기술, 태도,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역량이 갖추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은 역량을 쌓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제 중심의 접근법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방법을 가급적 북한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생활세계, 법체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등 북한주민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례증심의 접근법도 중요하다.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를 제시하고, 적응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사례집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영화, TV,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주민 간의 만남과 대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행사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생각, 가치관, 소망, 교육방식 등의 차이에 대하여 적극 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정치교육(통일교육) 담당 교원

통일 후 독일에서는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독의 정치교육이 공산주의 이념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치교육을 가르치던 교원(강사)들은 전원 해고되거나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 후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후 정치교육,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을 담당할 교·강사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강사를 교육시켜 자격증을 부여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정치교육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 교원, 퇴직 공무원,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정치교육(통일교육)의 주체

첫째, 독일의 경험에 기초하여 볼 때, 통일교육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 초기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에 민감한 반

응을 보였고, 반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구동독주민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을 구동독의 강제 교화 및 선전의 일환으로 착각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 역시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통일교육)을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에서는 민간단체가 정치교육(통일교육)을 주도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간단체의 정치교육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을 교육시켜 통일 후 통일교육 지도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원’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과 같이 정치교육(통일교육)을 주도할 기관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정치적인 재사회화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통일 초기 정치사회화교육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고려하여 단계별 통일교육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와 남한사회 적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원’을 통일 이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치사회화교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자매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치사회화교육도 중요하다. 통일 후 남한의 시민단체, 각종 단체 및 협회,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북한의 자매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동독 재건을 시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 7)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 직후 독일정부는 구서독의 제도를 구동독지역에 속히 이식하면 사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역시 구서독식의 방법



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면, 민주시민의식 제고와 통일국민 의식함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오랜 기간 동안 동서독 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점은 독일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통일교육은 그것이 실시되는 고유한 정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행위는 ‘지금’과 ‘여기’라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특정한 정치적인 조건을 기초로 구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 후 구동독지역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서독의 우수한 정치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와 동독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과 극단적 정치행태를 초래하였고, 동서독주민의 의식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 8) 중심적 통일교육기관

독일에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담당기관이 존재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통일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교육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후 독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준비 및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국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 등 정치교육기관은 통일 이후에 더욱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준비교육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지만,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에 관심 있

는 사람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요 목표 그룹이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독일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정치교육센터뿐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도 통일 후 정치교육을 담당할 기구나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통합교육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주무 통일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구섭(2016). 한국 통일교육의 현황과 독일 사례의 시사점.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pp.55-67.
- 고숙희(1999).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통일 전 서독과 남한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모·홍영환(2002).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25-44.
- 김경웅(1982). 정치교육론-정치교육의 발전과 전망. 유풍출판사
- 김기봉(2014).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pp.279-306.
- 김명철(1994). 통일 후의 북한주민교육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pp.33-64.
- 김미경(2011). 정치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과정 연구: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무(2005). 통일독일의 동독사 이해와 동독사교육에 관한 논의가 남한의 북한이해교육에 주는 시사점.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pp.29-43.
- 김상무(2005). 통일독일의 통일교육 권고안과 서독의 통일교육 지침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권, 제1호, pp.1-19.
- 김상무(2009). 통일독일 학교교육의 내적통일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5권, 제3호, pp.35-57.
- 김상무(2010). 1978년 서독 통일교육지침 결정 이후 중등 역사교과서의 동서독 서술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3호, pp.27-52.
- 김상무(2011). 통일독일의 분단사 및 분단사교육 논의가 한국의 분단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pp.1-23.
- 김상무(2013). 내적통일 관점에서의 독일통일 이후 중등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pp.105-149.
- 김영국(1997).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6권, pp.277-298.
- 김유경(2010). 독일연방공화국 중등학교 역사교육에서의 전후 현대사: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서독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학회. 역사학보, 제205호, pp.119-156.
- 김종남·채정민(2008).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4권, 제15호, pp.519-544.
-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시민교육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5권, 통일원.
- 김창환(2000). 독일통일 10주년과 그 교훈. 교육개발. 2000년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2001). 독일의 정치교육제도와 운영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신정.
- 김창환(2016). 독일 정치교육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23-133.
-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 문용린 외(199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박광기(2010).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pp.105-130.
- 박기석(1998).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독일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석(1996). 정치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6호, pp.239-263.
- 박병석(2004).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서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 박봉정(2002). 한국과 독일의 학교 통일교육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영(1981). 서독의 정치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제12권, 제1호, pp.121-152.
- 박재윤·백성준(1992).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 박찬석(1999).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집, 제1호, pp.185-204.
-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 신두철(2005).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pp.41-57.
- 신세호 외(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신혜진(1999). 통일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과 통일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일환(1995).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pp.523-548.
- 원준호·차조일(2014).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과에 대한 연구: 교육목적과 체계, 교육내용,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227-256.
- 윤재연(1998). 독일 정치교육 분석: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영(1997). 독일 통일교육 연구.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시아, 제4권, 제4호, pp.60-87.
-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이병련(1999). 독일통일과 동독 역사교육의 몰락.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pp.139-163.
- 이병련(2000).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역사교육.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제50호, pp.217-235.
- 이완호(2011). 독일통일을 활용한 수업 모형 연구.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제52집, pp.175-197.
- 임춘희(2012).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청소년 정치교육.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 전득주 외(1995). 독일연방공화국-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대왕사.

- 전득주 외(2000).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유평출판사.
- 전득주·페터마싱·허영식 편(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엠-에드.
- 정병기(2010). 독일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 진보평론. 제46호(2010년 겨울).
- 정용길(2003).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 비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5권. 제2호. pp.295-313.
- 정은찬(2016). 북한의 정치사상교육과 주민의식.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30-40.
- 주독대사관(1992). 독일통일 2주년 중간 결산.
- 최의철(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 최현호(1999).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pp.267-292.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 통일원(1994). 독일통일백서.
-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허영식(1994). 독일의 통일과 이에 비추어 본 정치교육.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독일 정치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배영사.
- 허영식(1996). 사회적 전망 취득과 정치 교육: 동서독 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23권. pp.137-159.
- 황병덕(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 황병덕(1997). 독일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5권. 제1호. pp.87-111.

### 〈외국 문헌〉

-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1984-1989). Staatsbürgerkunde - Klasse 7-10, Berlin, 1984-1989.*
- Anweiler, O.(1988).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 Baske, S.(Hrsg.)(1979).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 Beyer, H.-J.(1996).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 Böhnisch, L., u.a.(1992). Gesellschaftsstudie, Dresden.*
- Brähler, E., Richter, H.-E.(1995).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0-41/1995.*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2).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5–1999). *Tätigkeitsbericht 1985–1999*, Bonn.

Crome, E., Muszynski, B.(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Deutsches Jugendinstitut(1992).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Döbert, H.(1995). *Das Bildungswesen der DDR in Stichworten*, Neuwied.

Dorst, W.(1953).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Eckhard Ruminski(2012). *독일통일 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2호, pp.109–120.

Emmerling, E.(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1979).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Faulenbach, Bernd(2016). *Politische Bild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 Zur Rolle der parteinahen Stiftunge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1–122.

Feige, W., u. a.(1980). *Unterrichtshilfen Staatsbürgerkunde, Ost–Berlin*.

Förster, P., Friedrich, W.(1996).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Freiwald, H., u.a.(1973). *Das Deutschlandproblem in Schulbüchern der Bundesrepublik*, Düsseldorf.

Freya, K.(1990). *Lüg Vaterland*, München.

Fuchs, H. W., Reuter, L. 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Geißler, R.(2000). *Nachholende Modernisierung mit Widersprüchen – Eine Vereinigungsbilanz aus modernisierungstheoretisch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Geulen, D.(1998).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Opladen.

Glaab, M.(1996).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78–188.

- Glatzer, W., Ostner, I.(1999). *Deutschland im Wandel*, Opladen.
- Golz, H.-G.(2000). *Verlorene Generation Ost? – 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 Hafemann, H.(1993). *Von der Schwierigkeit, Demokratie und Selbstorganisation einzüben – Erfahrungen im Aufbauprozess des Landesjugendrings Thüringen*, *Zf-Päd*, 30. Beiheft, 1993, 283–297.
- Huettmann, Jens(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9–16.
- Klein, H.(1974). *Bildung in der DDR – 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 Knoll, J. H., Siebert, H.(1968).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 Krueger, Thomas(2016). *Besonderheit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Ostdeutschland*,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92–98.
- Kuppe, J.(1996). *Deutschlandpolitik der DDR*,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0–204.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Hrsg.)(1982).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1984). *Politische Bildung in Baden-Württemberg. Einrichtungen und Aktivitäten*, Stuttgart.
- Lindner, W., u. a.(1971).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 Mietzner, U.(1998). *Enteignung der Subjekte – Lehrer und Schule in der DDR*, Opladen.
-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1988).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1994).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 Neuner, G.(1973).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Hrsg.)(1970). *Allgemeine Richtlinien und Richtlinien für den Unterricht in den Fächern Erdkunde, Geschichte, Sozial- und Gem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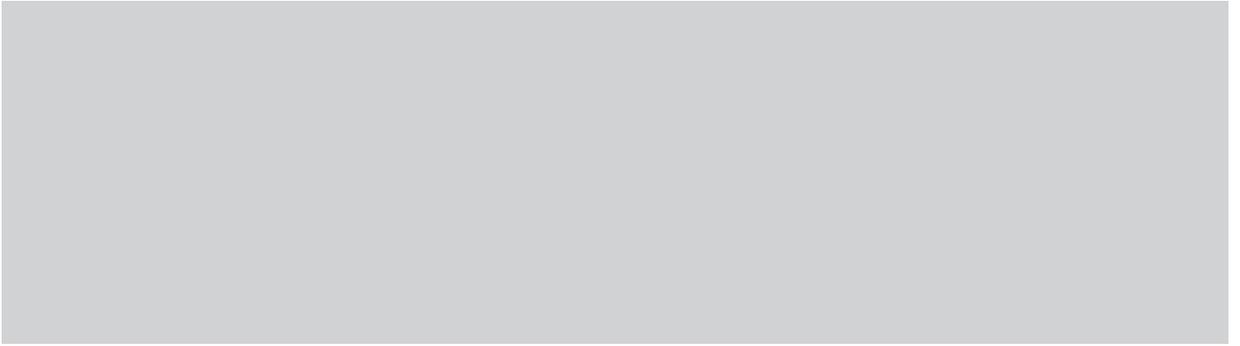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 schaftskunde, Hannover.
- Niehuis, E.(1973). *Analys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r BRD und der DDR*, Heidelberg.
- Olbrich, J.(2001).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 Papst, M., Schuster, D.(1993).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 Pöggeler, F.(1992).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 Pollack, D.(2000).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Sander, W.(Hrsg.)(1999).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
- Schlegel, U., Förster, P.(Hrsg.)(1997). *Ostdeutsche Jugendliche*, Opladen.
- Schmidtchen, G.(1997). *Wie weit ist der Weg nach Deutschland? – Sozialpsychologie der Jugend in der postsozialistischen Welt*, Opladen.
- Seliger, B.(2009). *독일통일 20년-정치·사회·경제적 결산.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 Spittmann, I.(1995). *Fü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 Statistisches Bundesamt(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2000). *Berliner Statistik 2000*.
- Strohschneider, S.(Hrsg.)(1996). *Denken in Deutschland –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in Ost und West*, Bern.
- Sturzbecher, D., Kalb, K.(1993).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D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0(1993), 143-147.
- Sußmann, R.(1985).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Langfristige Wirkungen*, Opladen.
- Thierse, W., u.a.(Hrsg.)(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 Ulshöfer, R., Götz, Th.(Hrsg.)(1975). *Politische Bildung – Ein Auftrag aller Fächer*, Freiburg.
- Veen, H.-J.(1999). *Juge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ihr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im Vereinigungsprozeß*, *Deutscher Bundestag(Hrsg.)*,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d.III/3, Baden-Baden, 2394-2448p.
- Vollbrecht, R.(1993).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pladen.
- Weidenfeld, W., Korte, K.-R.(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Weisseno, Georg(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vor 1990*,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3-28.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정책문서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 들어가며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와 민주적 정치문화를 필요로 한다. 민주적 정치문화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능력,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민주적 시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도 국민들이 처음부터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배움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당시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지사였고, 1999년에서 2004년까지 독일 대통령을 역임한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가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와 그에 속한 시민을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자유적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이는 붕괴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분단시기에 이미 서독은 민주시민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서독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과 각 연방주에 설치된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은 유럽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구였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종 정당들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재단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재단과 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서독의 시민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매일 수많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주

목할 사실은 통일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제도가 그대로 신연방지역에도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업교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독에는 분단시기에 이미 장기실업자를 위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직업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이 존재했다. 직업재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은 일반적인 직업교육 기간과 동일하여 3년에서 3년 반이며 이를 이수하면 각종 직업협회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고, 이러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은 사설 훈련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노동청, 군대 또는 보험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창출조치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정부문서를 통해서 보면 통일 이전부터 이미 동독의 개혁정부가 서독과 동일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제도를 동독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의 정착

### 제1절 서독의 민주시민교육과 동독의 국가시민교육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독에서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동독에서 ‘국가시민교육’으로 불리던 정치교육 과목의 개혁을 통해 서독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동독의 학교에도 정착시키는 것이 그 목표였다.<sup>1</sup> 즉, 동독체제 개혁은 정치교육의 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독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정치교육의 개혁 작업이 시작되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정치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2</sup>

<sup>1</sup> 동독 ‘국가시민’ 교과재 정비에 관해-츠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문서번호 1),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문서번호 2),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3).

<sup>2</sup> 여기서 독일의 정치교육전통과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서술하는 두 챕터는 필자가 2007년에 Korean Perspective에 발표한 논문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독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pp.132-149.

##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전통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치교육의 기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각 지역을 분할지배하던 제후들은 초기 계몽사상을 통해 싹트던 혁명적 사상들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sup>3</sup> 19세기에 독일이 통일제국을 이루었을 때에도 정치교육의 목적은 여전히 혁명적 사상, 즉 당시 급속히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확산을 막는데 있었다. 1889년 빌헬름 2세는 ‘국가시민교육(staatsbuergerliche Unterricht)’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sup>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교육의 성격은 노동운동의 이념 확산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때까지의 정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단체들이 각자의 정치이념을 홍보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기제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이 시기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와 같은 학자들이 시민대학운동을 제창하고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교양을 쌓을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시민대학운동 외에도 노동조합,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919년에 ‘향토봉사 제국센터(Reichszentrale fuer Heimatdienst)’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전신은 1918년 3월 1일에 성립

<sup>3</sup> Kuhn, Hans-Werner; Massing, Peter; Skuhr, Werner(편):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Entwicklung Stand Perspektiven(독일의 정치교육, 발전, 현재, 전망). Opladen 1993, p.13; Röhrig, Paul: Politische Bildung. Herkunft und Aufgabe(정치교육, 기원과 과제). Stuttgart 1964, p.39 참조.

<sup>4</sup> Kuhn; Massing; Skuhr(편): Politische Bildung, p.35.



된 ‘향토봉사 중앙센터(Zentralstelle fuer Heimatdienst)’였다. 이 기구는 제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종결되어가던 시기에 국민들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민들에게 민주적 의식과 새로운 헌법체계를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 기구를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국가의 제도와 기구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여 민주주의로의 교육이 아닌 ‘국가로의 교육’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비판은 분명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으로 인해 독일영토에서 분리되었던 동쪽 영토에 사는 구독일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독일영토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복귀를 찬성하도록 선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기구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실패로 몰아간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였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의 제3제국, 즉 우리가 흔히 나치제국이라고 말하는 해당 시기의 정치교육은 나치의 정치이념을 국민에 주입시키고, 그를 통해 국민동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독일국민들이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하였는가 혹은 오히려 그에 동조하였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구의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었다,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되는 논의이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sup>5</sup>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콘텍스트에서 문제를 고찰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sup>5</sup> Daniel Goldhagen의 책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발표 이후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역사논쟁이 그 한 예이다.

## 2. 서독의 민주시민교육

1945년 나치가 패망한 후 3년 간의 연합군 점령기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 두 개의 국가가 독일영토에 건국되던 때, 민주주의체제가 성립되고 있던 서독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새로운 엘리트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테오도르 에셴베르크(Theodor Eschenberg)와 아놀드 베르크슈트라서(Arnold Bergstrasser) 같은 정치학자들이 나서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들은 스스로 정치교육협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정치교육 운동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sup>6</sup>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재단, 노조 그리고 교회와 시민단체들도 정치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일시민들은 1950년대에 이미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이라는 과제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담당영역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52년에 국가기구로서 내무부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의 전신인 ‘향토봉사 연방센터(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기구의 탄생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향토봉사 중앙센터’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이 기구는 민주주의 수호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부들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에 새로이 구성된 정치교육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더욱이 1958년 건립된 정치교육원 동방학교(Ost-Kolleg der 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의 경우 나치체제와의 협력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sup>6</sup> Siegfried Schiele, ‘Ein halbes Jahrhundert staatlich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독일 국가의 정치교육 반세기)’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004년 2월 16일 7-8호에 수록.



1960년대 서베를린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된 서독의 학생운동은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저항이었다. 전후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세대는 나치시대에 무엇을 하였는가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나치에 대한 침묵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사회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을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연방정치교육원과 서독 연방주들의 주정치교육원의 성격도 점차 변화되었다. 1963년에 ‘향토봉사 연방센터’가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개칭되었고, 1973년 10월 연수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파울 프랑켄(Paul Franken)이 정년퇴임한 후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ietrich Genscher)가 연방의회에 진출한 기민당/기사당(CDU/CSU), 사민당(SPD) 그리고 자민당(FDP) 세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수원 원장단(Direktorium)을 구성하면서 서독의 연방정치교육원은 다원화되는 사회적 변동을 반영하는 민주적 기구로 새로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이 서독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물론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내무부 산하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세계대전 이전부터 오랫동안 활동해 온 수많은 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함께 시민대학을 통해 행해진 정치교육 프로그램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오랜 정치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정치교육 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정치교육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근거로 고유의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정치교육의 정의와 그 방법론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교육의 담당자들의 정치적 이념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꼭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남부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걷는 학자

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최소한의 합의점이 현재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chsbacher Konsens)’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독일의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민주시민교육에서 주입식 교육 또는 일방적인 강요 또는 교화하는 교육을 금지한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세뇌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적 세뇌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고자 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에 반작용한다. 2.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점들은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을 받는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존의 정치 상황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sup>7</sup> 이러한 합의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지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합의로 인해 정치재단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기본적인 가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논쟁점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신중한 자기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었다.

토마스 마이어(Thomas Meyer)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독

.....

<sup>7</sup> Wolfgang Sander, Beutelsbacher Konsens, Georg Weißenbo, (편): Lexikon der politischen Bildung, , Schwalbach 1999/2000 2권, pp.31-32.



일의 민주시민교육이 내적인 다원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sup>8</sup> 그는 이 점을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큰 강점이라고 본다. 그러한 내적 다원성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은 산업화된 현대 대중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1960년대 이래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러한 내적 다원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치체제 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서독이 유럽과 세계무대에서 과거청산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통일 전부터 서독에서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들 단체의 성격은 아주 다양하여, 특정 사회집단의 문제만을 다루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체도 있고, 일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이 존재한다. 독일의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정치재단들도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재단이라는 기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기구이다. 그 외에도 교회 또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북부독일의 로쿰(Loccum), 남부독일의 튜징(Tuzing) 그리고 뮐하임(Muehlheim)과 같은 도시에 설치된 기독교 아카데미(Evangelische Akademie)들은 연중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들을 모아서 출간되는 저작들이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각 지역의 시민대학들도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래의 <표 2-1>은 서독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과 재정적 기반을 총괄적으로 보여준다.

.....  
<sup>8</sup> 이하 이은정, 2007년 3월 21일 경희대 NGO대학원 특별강의 참조.

표 2-1) 통일 전 서독 민주시민교육 현황

담당기관/단체	활동 유형	재정적 기반
연방, 각 주 정치교육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교사연수, 교재개발) 민주시민교육 단체 지원 및 교재개발 자체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내무부
4개 정치재단	포럼 세미나 역량강화 훈련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대학 세미나	자체
교회	세미나	자체
노조	세미나	자체
정당	세미나	자체
신문, 기업	포럼	자체

### 3. ‘국가시민교육’ 수업의 개혁을 둘러싼 동독정부 내의 논의

동독은 1945년 승전연합국에 의한 분할점령으로 소련군 점령지역이 되었다가 1949년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건국된 국가였다.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이 지역이 소련군 점령지역이었던 194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국가시민교육 수업이 진행되었다. 정치교육 과목이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은 동독과 서독 간에 차이가 없었다.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개혁이 가시화되고 동독주민들이 대거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서방으로 탈출하거나 동유럽 주재 서독의 대사관을 점령하고 이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던 1989년 여름, 동독에서는 정치교육 수업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 국가시민교과방법론학과의 교수들이 동독체제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가 시민교육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한다.<sup>9</sup> 그들은 개혁된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시민 교과와 명칭을 사회 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었다.

1989년 11월 16일에 동독의 교육부도 국가시민교육은 앞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담당할 시민을 교육하는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동독의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수업을 지속할 것을 권하였다.<sup>10</sup> 11월 18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하고 난 후인 11월 29일에 동독 교육부는 국가시민교육은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sup>11</sup> 그러나 1990년 2월 21일에 동독 교육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사회과목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사회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를 위해 동서독 간의 교원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 및 유치원교사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 교과 담당 교원들의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11학년과 12학년의 철학수업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수업의 목

<sup>9</sup> 동독 '국가시민' 교과와 재정비에 관해-츠빅кау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문서번호 1).

<sup>10</sup>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문서번호 2).

<sup>11</sup>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3).

표이며,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수방법과 수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고 발표하였다.<sup>12</sup> 새로이 도입된 사회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과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변 환경에 관한 주제와 전 지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3</sup>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 27일에 동독 교육부의 정치교육 프로젝트 그룹이 작성, 제출한 권고안에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며,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시간의 사회과목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4</sup>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해야 하며,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하며, 사회과목 담당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통일 당시에는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동독의 대학에 존재하지 않고,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하였다.<sup>15</sup>

.....  
<sup>12</sup>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문서번호 7).

<sup>13</sup>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문서번호 8).

<sup>14</sup>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문서번호 17).

<sup>15</sup>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문서번호 17).



## 제2절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통일과 함께 발족한 신연방주의 교육부들은 모두 중등교육의 사회과목 개편을 위한 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sup>16</sup> 그 목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사회과목의 수업을 통해 사회적이자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만 한다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는 설명하였다.<sup>17</sup>

통일된 독일의 신연방지역 주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교육보다 성인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각 주 단위의 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통일 직후부터 주총리실에 임시적인 ‘정치교육’ 위원회를 도입했고 1992년 7월에 주정치교육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sup>18</sup>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은 설립단계에서 주정부의 자매결연 파트너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았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통일 직후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1994년에 주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 1인당 2.6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참고로 1994년에 연방정치교육원은 주민 1인당 0.92 마르크

.....

<sup>16</su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4),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학교 중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5), 튀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6).

<sup>17</su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4).

<sup>18</sup>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년(문서번호 60).

크, 베를린은 0.82 마르크, 작센주는 0.34 마르크를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지출한 것과, 동 연방주가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화해’에 초점을 맞춘 브란덴부르크주만의 특별한 길을 선언하고 공공부문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거의 해고하지 않았던 정책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과거청산정책을 엄격하게 추진한 작센주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주민 1인당 지출한 비용이 브란덴부르크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는 것은 이 두 사안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동독시절 당에 의해 행해진 정치교육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이전의 정치교육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대하였다. 현재 신연방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독일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비어와 크레머는 설명한다.<sup>19</sup> 이 점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부터 교육요원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통일 논의에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에는 1945년 종전 이후 서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신연방주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과적으로 신연방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꿈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sup>19</sup> Wolfgang Beer/ Will Cremer, Die Traeger ausserschulischer politischer Bildung(학교 외 정치교육 담당자), Wolfgang Beer u.a. (편), Handbuch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성인정치교육 사전), Schwalbach 1999, 111-143, p.126.



중반 신연방 각 지역에 기승을 부리던 극우 나치세력은 오랫동안 과거청산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독일의 정치가와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지속되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 도심 곳곳에 등장한 반유대주의적 낙서, 나치의 미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갔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실제로 민주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민주시민교육을 찾듯 마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를 하룻밤 사이에 치유할 수 있는 ‘소방수’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한다.<sup>20</sup> 1990년 중반 이후 등장한 신연방지역의 극우 나치세력의 문제를 대하는 정치가들의 태도가 이러한 지적이 정확한 관찰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독일의 통일이 구동독지역이 신연방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 대부분의 서독의 제도들이 신연방주에 그대로 이전되게 되었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체계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연방지역에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주에 정치교육원을 설립하였지만 그 기관이 지원해 줄 민간단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정치재단, 교회, 노조 등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독의 구조를 이전하고 프로그램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신연방지역에서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독일의

.....  
<sup>20</sup> 위의 논문 p.126.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활동가들의 창의력과 인내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국가가 민주시민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유급의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는 독일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나오는 것이 학교 외의 민주시민교육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활동가들이 보면 마치 꿈과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패전 후 승전 연합국들이 가져다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비교적 성공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기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기관은 연방정치교육원과 6개의 정치재단의 역할이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연방정치교육원은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일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이며, 정치재단 역시 독일 정치제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장치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에 속한 국가기관으로 각 주에 설립된 주연수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과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들은 일종의 민주시민교육 보조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치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 담당 단체들의 다양성과 그 교육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돕고 정치교육의 목적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교육원의 설립 규정에 쓰여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과 구조를 보면 연수원의 원장과 사무처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학술자문단과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있다. 이 감독위원회는 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보장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교육원의 예산, 사업계획, 활동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학술자문단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현재 감독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22명이며 기민당과 사민당 소속이 각 8명 그리고 자민당, 녹색당, 좌파연합 소속이 각 2명이다. 감독위원회의 회장은 제1정당에서, 부회장은 제2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학술자문단은 총 인원이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방정부의 내무부장관이 그 구성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자문위원은 한번 연임이 가능하며 자문단이 새로운 구성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새로운 자문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치교육원의 현재 조직은 총무행정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Z국(Abteilung Z)과 전문주제를 담당하는 전문국 그리고 원장 직속의 기획실과 전문국장 직속의 2개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그룹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가 변화될 수도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1990년대 이후 1,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의 60%를 민간단체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만을 자체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여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방정치교육원이 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자체활동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재개발과 출판활동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는 연방정치교육원의 출판물들은

독일 현대 역사, 사회, 정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접근하여 성인교육과 학교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의회(Das Parlament)’라는 신문과 그 신문의 부록으로 매주 발행되는 ‘정치와 현대 역사로부터(Aus der Politik und Zeitgeschichte)’와 같은 출판물은 대중성과 고급 정치비평 그리고 학술적인 분석을 잘 조화시킨 수준 높은 출판물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출판활동 외에 세미나, 답사, 전시회, 경연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조직할뿐만 아니라 언론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활동의 목적이 ‘시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있다고 연방정치교육원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재적 지배체제를 경험한 독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 등의 가치와 책임감을 국민들의 의식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만 한다”<sup>21</sup>라는 것이다.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사회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시대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전후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종전된 지 반세기도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이 나치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종종 젊은 세대와 보수 세력에 의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범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재단의 활동도 포함된다.

.....  
<sup>21</sup>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bpb.de>



정치재단이라는 것이 독일에만 있는 특수한 조직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의 부속조직이 아니다. 물론 정당과 정치재단이 정치 이념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정치재단과 정당은 조직과 재정적인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단체이며, 정치재단의 예산은 내무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6개의 정치재단에 지불되는 연간 예산의 총액은 약 4,500 억원이다. 각 재단은 그들이 연계되어 있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의거해서 예산을 배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재단은 재정문제에 있어서 연방회계청(Bundesrechnungshof)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정치재단은 직접적으로 정당을 돕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연방행정원(Bundesverwaltungsamt)은 수시로 정치재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만일 정치재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을 지원한 것이 발견되면 해당 정치재단은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만 할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재단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치재단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재단들은 직접적으로 정당을 돕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매우 큰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정치재단은 현재 한국의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연구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의 정치재단은 총 6개로 프리드리히 에버르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아테나우어 재단(Adenauer-Stiftung),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사민당,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연합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부서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2) 통일된 독일의 정치재단

재단	설립년도	연계정당
프리드리히 에버르트 재단 (Friedrich Eber Stiftung)	1925(1949 재건립)	사회민주당(SP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	자유민주당(FDP)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	기독교민주당(CDU)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1967	기독교사회당(CSU)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1997(전신 무지개 재단연합 1988 건립 )	녹색당(Gruen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1992	좌파연합(Die Linke)

정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당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정당의 경우 교육의 대상이 당원과 당의 상근직원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 제한된 반면 정치재단은 특정한 당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재단이 정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 원내교섭단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그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노선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것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분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독일의 현대사회에서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본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정당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가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들과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정당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가가 왜 그런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재단들의 교육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거기에는 세미나와 학습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의 교육형태도 포함되지만 역량강화 훈련, 정치자문 그리고 포럼과 같은 장을 마련해 정치와 정책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활동도 속한다. 이들을 다시 자세히 보면 세미나와 학습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확대된 시간과 다양한 교수방법론적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을 조직하여 시민들의 사고방식, 지식, 행동의지와 민주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강화훈련에서는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학습과 연습과정을 통해 의사전달과 경영의 기본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포럼과 같은 장을 마련하여 정치와 정책을 전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정치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자문의 목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정능력과 행동능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실제 한편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지키면서 정당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채 정치적 이념만을 공유하는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기본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직업교육-계속교육/재교육

독일통일과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그들 중 근로연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 재교육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빨리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재교육과 실직 간의 악순환 고리가 생성되었고, 이런 프로그램 덕에 가시적인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용되었다는 사실은 정책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의 문제가 통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일 이전에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

1990년 초에 동독 노동부가 작성한 문서는 동독경제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1990년 1월 31일까지 이미 145,030명의 노동력이 해고되었다고 한다.<sup>22</sup> 그중에서 3분의 2만이 다시 직장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동베를린지역의 노동현황에 관한 설명이다. 당시 동베를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19,592명이며 이들이 대

<sup>22</sup> 동독내각회의 의결안-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 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문서번호 5).

부분 전문직 대학졸업자로 분류되는 그룹에 속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에 속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동베를린에는 1,968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동독 개혁내각 1기의 노동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노동력의 균등한 배포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방출(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이 직업전환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배정될 수 있는 직장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동독에서도 이미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에게 계속교육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이수한 후에 당연히 새로운 직장을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통일된 독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것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일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sup>23</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조약 8장 37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수료증 및 능력증명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동독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이 통일 후에 자영업적 제조업자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증(Berufsausbildung)과 장인자격증(Meisterausbildung)은 개별적인 심사 없이 서독에서

<sup>23</sup>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였다. 그중 213,127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명은 직업교육훈련 이수였다. 후자 중 38,477명은 대학졸업자였고 7,891명은 전문대졸업자, 그리고 65,780명은 전문학교졸업자였다(문서번호 44).

취득한 자격증과 동일하게 인정받았다. 동독에서 취득 가능한 전문자격증에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이 서독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야 했다.<sup>24</sup> 베를린시의 경우 개인이 동독에서 취득한 일반적인 직업자격증의 동등성 확인을 요구할 경우 서류심사 비용으로 40 유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인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비서자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비용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심사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과 주거증명, 전문직 자격증, 장인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명서 등이며, 주거지역의 관할 관청 직업훈련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신청을 할 수 있었다.<sup>25</sup>

분단시기에 동독과 서독에서는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를 졸업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이 근로인력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업체가 정한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생(Auszubildende)을 위한 자리가 정해졌었다.<sup>26</sup> 그것은 서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제도와는 그 구조나 직업교육의 목표, 방법 및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sup>27</sup> 그러나 통일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게 돌아갔고<sup>28</sup>, 모든 직업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었다.<sup>29</sup>

통일조약에 의해 명확한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직업교육연례보고서를 보면 신연방지역에서 직업교육이 아직 방향전환단계에 있

.....  
<sup>24</sup> 동독의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졸업장의 인정 실태. 연방의회 의원 비쳐와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1999년 3월 17일). 연방의회 인쇄물 DrS 14/574.

<sup>25</sup> <http://www.berlin.de/sen/arbeit/besch-impulse/berufsanerkennung/facharbeiterabschluesse.html>

<sup>26</sup> 독일통일 20년-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문서번호 54).

<sup>27</sup>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발췌](문서번호 32).

<sup>28</sup> 통일조약[발췌]-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문서번호 21).

<sup>29</sup>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문서번호 36).



다고 하였다.<sup>30</sup>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상응하는 직업자격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1992년도에 신연방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전보다 약 20 퍼센트 증가한 12,000여 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업교육훈련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신연방주들은 직업재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예를 보면 기업의 직업교육 확충 지원, 직업교육연합 지원, 초기업적 연수생 지원, 기업현장에서의 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을 위한 협동모델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받았다. 재소자를 위한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 과정, 농업 분야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청소년 지원 단체를 위한 지원, 청소년 직업훈련을 담당할 교수인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교육부장관이었던 마리안네 비어틀러는 이런 다양한 직업재교육/계속교육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31</sup> 다양한 계속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적 절차 확립의 징표이며, 그것은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1996년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행한 계속교육 연례보고서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는 교육연수제가 도입된 것을

<sup>30</sup>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문서번호 36).

<sup>31</sup>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안네 비어틀러(문서번호 28).

알 수 있다.<sup>32</sup> 이 제도는 피고용자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주정부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도입했다. 199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사이에 1,663개의 프로그램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의해 교육연수 참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았다. 그중 27%인 445회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25%인 414개 프로그램은 문화, 그리고 48%인 794개 프로그램은 정치와 관련된 성인교육이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재원은 1,330만 마르크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비용의 지원 및 연방주 공인기관 및 민간교육시설 그리고 중점 과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아주 낮은 편이었다. 1994년 8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실업자로 등록되었던 171,440명 중 84,258명이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는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였고, 1995년 8월에는 164,166명 중 34,341명만이 참가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경제현실 밀착형 자격능력’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였다. 1992년 이후 약 34,800명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격능력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주정부는 참가자당 1,300 마르크 상당의 지원금을 지출하였다.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놀라

<sup>32</sup> 브란덴부르크주 1996년 계속교육 보고서(문서번호 48).



운 일이 아니었다.<sup>33</sup> 더욱이 구동독지역 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전반에 자신이 보유한 자격과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에 따라 급여와 임금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은 당시 신연방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것과 관계 없이, 통일 초기에는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능력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sup>33</sup>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문서번호 51).

## 나가며

1990년대 초반의 신연방지역 주민이 겪은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한스 요아힘 마츠가 1992년에 지적하였다.<sup>34</sup> 그에 따르면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부문의 변혁으로 인해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그는 보았다. 교육을 통해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겪은 변화를 소화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교육은 서독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을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히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서독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한 바 없는 후견인 행세로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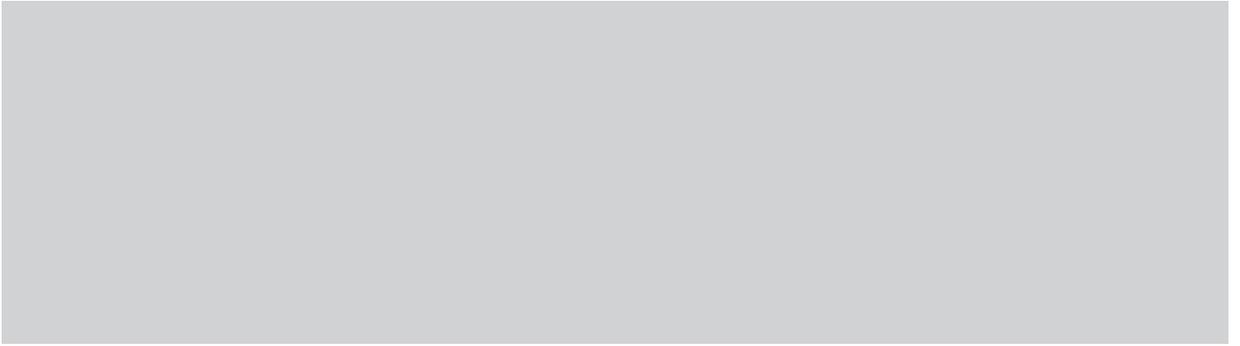
2016년 현재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는 더 이상 없다. 젊은 세대는 독일 사회를 동서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조차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자리잡게 된 것인지 그리고 신연방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과 계속교육이 결과적으로 마츠 박사가 지적하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에 신연방주에서 제공된

.....  
<sup>34</sup> 신연방주의 계속교육[발췌](문서번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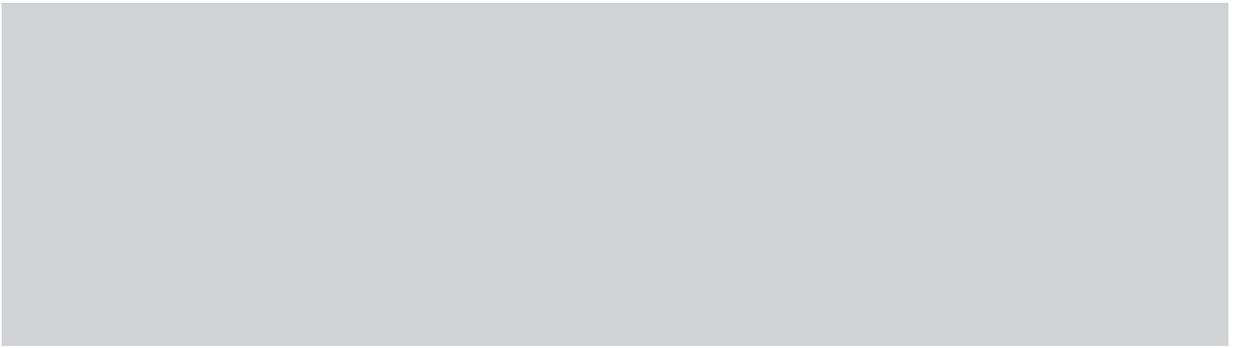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직접적이고 참여한 대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동독 '국가시민' 교과의 재정비에 관해-츠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츠빅카우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2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	1989년 11월 16일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3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	1989년 11월 29일	동독 교육 · 학술부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년 2월 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Ausgabebetag: 2. März 1990
5	동독내각회의 의결안-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 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	1990년 2월 13일	동독내각회의; 노동알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Sammlung(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HdBA Mannheim): SEAD-BA 8.4 / 618
6	동독 내 '사회' 교과의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 · 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동독 교육 · 학술부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	1990년 3월	동독 교육 · 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동독 교육 · 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9	중앙위원회 내 교육 · 육아 · 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중앙위원회, 교육 · 육아 · 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0년[발체]	1990년 4월	연방교육 · 학술부장관 위르겐 W. 밀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11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년 6월 6일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Ausgabebetag: 19. Juni 1990
12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플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Ausgabebetag: 27. Juli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ag: 13. August 1990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ag: 13. August 1990
15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57-Ausgabetaag: 4. September 1990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시-동독 교육 · 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Ausgabetaag: 4. September 1990
17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	1990년 9월	동독 교육 · 학술부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ag: 26. September 1990
19	통일조약[발취]-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20	통일조약[발취]-제16장: 연방 교육 · 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B: 청소년 직업교육지원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21	통일조약[발취]-제16장: 연방 교육 · 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 신교 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의 요구	1990년 9월 21일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2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 등교육 1단계 '사회 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 · 교육 · 스포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 회 교과: 하움트술레, 레알술레 및 김 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 · 학 술 · 문화부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2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 학교 중 하문트솔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작센-안할트주 교육 · 학술 · 문화부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26	튀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솔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튀링겐주 문화부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27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1년[발췌]	1991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에네 비어틀러	1991년 4월 15일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에네 비어틀러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29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발제]	1991년 12월 10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년 12월 16일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차관 리들; 연방의회의원 비스민(기민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32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회의의 보고[발제]	1992년 3월 16일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BLKL)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3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2년[발제]	1992년 5월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il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4	신연방주의 계속교육[발췌]	1992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35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2월 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	1993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37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년 12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38	동서독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년 2월 17일 및 18일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 일자	매르키체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r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Zeitungsaus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4년[발췌]	1994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41	각 연방주 내 계속교육정책[신연방주 관련 내용 발췌]	1994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체계적인 향상 교육-성공적 접근	1995년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4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5년[발체]	1995년 6월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44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부분 발체]-연방의회 민주시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연방의회; 민주시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팅] 소수그룹;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5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 부분 발체]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6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 외 연구 분야 발체]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7	독일의 고용 및 자격심사 기관	1996년 1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BAG Arbeit e.V.
48	브란덴부르크주 1996년 계속교육 보고서	1996년 12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49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년 소년	1997년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련 점들	1997년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버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슈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1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년	마르크 쉬틀릭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52	신연방주 내 계속교육을 위한 상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 및 성과	1999년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 직업교육원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년-연표	2009년 1월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BAG Arbeit e.V.
54	독일통일 20년-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	2009년 10월	독일연방정부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55	노동 연방연구회 엘렌 루트 슈나이더 (Ellen-Ruth Schneider)와의 인터뷰	2010년 9월 30일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년 10월	연방 노동 · 사회부(BMAS)	
57	신연방주 관련 연방 교육연구부 (BMBF) 조치	2010년 10월	연방 교육 · 연구부(BMBF)	
58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및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 후스터	
59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60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년	2011년	베르너 퀴첵	<a hre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a> (Stand: 15.6.2015)

#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60)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츠빅кау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의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학과의 교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독의 ‘교육학 저널’(1989년 말 발행), ‘역사 및 국가시민 교과 저널’(1990년 1월호)에 수록되었다. 그들은 학교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 교육과 육성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시민 교과의 명칭을 사회 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 배양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진행되던 국가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수업량이 과도하게 많으며 수업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과정으로 전락되어버린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보면 그들이 동독에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2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

1989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교육부가 국가시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독일 교사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이 권고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은 일단 통상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학기말이 아니라 학년말에 성적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구두로 진행되던 교과 최종 이수시험을 생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7학년에서 10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시민교육의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은 사회주의 색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주의의 개혁'을 담당할 할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체제, 사회 및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권고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병존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동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동독 교육부는 이 견해서에서 성숙한 국가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시민 교과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국가시민 교과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현 학년도에 있어 현행 교과시간은 계속 유효하며, 동년 하반기의 상세 계획은 1990년 말까지 공표될 것이다. 1990-1991년도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토론을 위한 더 많은 사항을 밝힐 것이다.

출처\_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문서 번호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 초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임금부 및 그 하부 기관은 매년 필요한 직업전환교육 조치의 범위 및 체계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부와 산하 기관들은 노동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직업전환을 위한 학습과 교육 내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공해야 한다. 직업전환교육 기간 중 시민들은 정해진 실업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체들과 교육기관들은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Ausgabetag: 2. März 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노동알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초에 동독 노동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미 동독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31일까지 145,030명의 노동력이 해고되었다. 이 수치는 환경과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구조조정과 필요한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 중 107,575명은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 37,455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총 158,602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베를린이다. 베를린에 현재 고용가능한 일자리는 14,782개인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9,592명이다. 방출된 노동력의 대부분은 '전문직 및 대학졸업자'로 불리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에 이 그룹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단지 1,968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학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아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지원자 대 일자리 수의 비율이 줄(Suhl)지역의 경우 1:1.3인데 반해, 베를린에서는 1:8이다.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일자리가 과대 공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노동력의 분포가 지역의 사업체 분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단은 방출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직업전환교육을 수료한 후 얻을 수 있는 직업과 직장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다.

노동력 및 자격능력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면모를 쇄신하게 될 노동청과 협력 하에 노동시장연구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_ Sammlung(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HdBA Mannheim): SEAD-BA 8.4 / 618



문서 번호 6 동독 내 '사회' 교과서의 새 도입에 관해 동독 교육·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 2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내린 지시로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사회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 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사회 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각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지도본부(Kabinett) 및 여러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동서독 교원 간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교원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 교과 담당 교원들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1989/1990학년도 후반기 사회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별도의 성적평가 없이 수업참가이수증만을 발급받도록 한다고 지시하였다.

출처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학술부가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의 철학수업과 관련하여 내린 권고안이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통해 철학수업이 상이한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파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에 편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철학과목이 이전의 국가시민교육 과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철학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자율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데 목표가 있으며, 그를 위해 철학수업의 교과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방법의 경우 이전과 달리 교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고 특히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문서 번호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과정계획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운 교과인 사회 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7학년과 8학년 대상의 교과 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환경에 맞추어져 있다면,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초점이 있다.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중의 대화에 있어 학습한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문서  
번호 9

중앙원탁회의 내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중앙원탁회의,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중앙원탁회의에 설치된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이 원탁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사안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와 의회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정당 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 국가 예산에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예산을 반영
-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재원과 시설 그리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마련

출처\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문서 번호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0년[발췌]  
1990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교육·학술부장관 위르겐 W. 뮐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1990년에 발간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에서 동서독 간의 교류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동독과의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직업교육 부문에 있어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 11월 동독에서 급격한 변혁이 시작된 이후 동서독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이 변화되었고, 협력이 확대되었다. 1990년 1월에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동독 교육부는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동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앞으로 구성될 기구의 과제와 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협력의 목표는 동독의 개혁과정이 계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동서독은 이미 1987년 이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현재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왔다. 이 회의를 위해 동독의 대표들이 서독 연방교육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미 직업교육과 관련한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었다.

**출처\_**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의 개혁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교육기관과 탁아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이다. 드 메지에르 정부는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입각한 이후 개혁을 위해 수많은 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 명령도 직업교육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들은 탁아시설 및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교육과 관련해 합의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체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그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유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자신의 의무와 유치원, 직업교육기관 등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체에서 부담한다. 사업체들은 교육시설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적자금 지원이나 세금감면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직업교육 중인 견습생은 직업교육을 주관하는 사업장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도 직업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해체될 경우 기업은 견습생이 다른 사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이 명령에는 사업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시설 설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12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서독의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주 단위의 담당 관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동독의 구역행정기관이 동독지역에서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독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는 규율 되지 않았던 부분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서독 연방정부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동독에 다른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 기존의 수공업 사업체 운영 자격 및 마이스터 자격증 사용,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 교육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권리는 보호받으며, 기존의 견습관계는 견습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Ausgabetag: 27. Juli 1990

문서  
번호 13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_

이 법은 화폐통합 이후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으로 각 연방주가 학교법을 제정할 때까지 직업학교의 업무와 설치 그리고 재정을 규정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는 공립학교이다. 직업학교의 운영주체는 시외 행정구역들 및 각 시이다. 직업교육 수업은 독일연방의 독일주문화교육장관협의회가 정한 통상의 교과과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문직종의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서류 및 시험규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별도의 학교졸업시험은 실시되지 않는다. 1990년 9월 1일부로 운영주체는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체 직업학교 및 지역 직업학교는 1990년 8월 31일부로 해소된다. 그 물자 설비는 새로 설립된 직업학교로 이전된다. 국가는 사업체 운영 및 직업학교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그를 감독한다. 직업학교의 수업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g: 13. August 1990



문서 번호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_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직업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독의 법률규정들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견습관계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견습생이 원할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는 기존에 체결된 견습계약들이 만료될 때까지는 직업교육생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직업아카데미와 사업체 부설 다른 직업재교육기관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g: 13. August 1990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전인 1990년에 여름방학 이후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동독 교육부장관이 8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중에 직업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등단계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1990학년도에 학교를 떠났으나 아직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은 1990-1991학년도에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다음 단계의 학급과정을 수료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받았던 수업단계를 끝까지 수료할 수 있다. 10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일 경우 이들은 상응하는 수행능력을 전제로 11학년으로 확대 일반고등학교(EOS)에 전입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재입학을 위한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57-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사-동독 교육·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장관이 통일 직전에 내린 조치로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에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거나 무직업 상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소요될 재원은 직업학교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9월에 새로 시작되는 견습 및 직업교육 학년도부터 실시되며, 통일 이후 구축될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방주들이 자체적인 학교법을 제정하는 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Ausgabetag: 4. September 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에 설치된 정치교육프로젝트 그룹이 통일 직전에 작성, 제출한 권고안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에는 동독과 서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시간의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앞으로는 사회과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현재 동독의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동독정부가 통일 직전에 발표한 학교령이다. 그 목적은 동독지역의 학교제도를 서독의 학교체계와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지닌 과제와 목표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공립학교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Kommune)가 된다. 학교제도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학교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Schulversuch)을 도모하거나, 혹은 특별한 실험학교(Versuchsschule)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지원센터(Jugendhilfe) 및 특수학교, 자문단체 및 보건의료소 등의 기관들과 학교 간의 협력방식도 새로이 규정된다.

출처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부록 I 14장 중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법들이 변경된다.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학 계획위원회의 경우 대학건설진흥법에 따라 대학교의 설립 및 확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 대신, 단순 다수결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도 말까지 대학건설진흥법의 부록에 언급된 대학교의 목록에 동독지역의 대학교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1994년도 말까지는 동독지역의 대학교들을 위한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기본법에는 동독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심사과정도 전국입학조정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동독 병역의무자의 병역수행 및 병역 중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대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에 설립된 연방주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학기본법 규정에 상응하는 연방주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연방직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직업학교, 야간 하우트슐레, 직업 단기과정, 김나지움 및 야간 실업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간 직업교육 지원금의 액수를 동·서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책정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문서  
번호 20

통일조약[발취]-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B: 청소년직업교육지원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조항이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서독법들도 통일조약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진흥연방법
- 직업교육진흥 자문단 설립에 대한 명령
- 상위 전문대학, 학원 및 대학 수학 시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명령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지원 명령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1

통일조약(발췌)-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장이다. 이 조약에 따라 변경되게 될 서독의 연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법:

직업교육필요직업군 및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따른 자격시험합격증은 동서독 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동법 2절);

특정 명령들은 연방주 총리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동법 3절 a항);

기존의 직업교육 관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d항);

사업체들은 견습계약에서 그것이 요구되는 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그 목적에 맞게 지속할 의무를 지닌다(g항);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부합하게 직업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은 종전의 법률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i항).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  
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의 요구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 \_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  
육 독일연방협회(KBE)

**내용** \_

이 문서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을 담당해 오던 서독 단체들의 협의회 대표들이 통일 직전  
인 1990년 9월 21일에 서독의 수도인 본에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계속교육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될 신연방주에서도 계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업무는 법률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과 규칙을 확립해  
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기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노동진흥법의 적용을 보장하여 계속교육  
기관들이 고용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출처** \_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문서  
번호 2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중등교육 2단계 대상 '사회 교과' 영역 교육과정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이 도입될 교과과목의 과제와 목표가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국가시민 교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어진 '진리'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대신에 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이지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정치시민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받아야 하며 정치적 극단주의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 교과계획에서는 사회 교과에 있어 교수학적 구상 및 다루어질 만한 주제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문서  
번호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업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개편을 위해 마련한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과목은 사회적이지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지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상화 및 난이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출처\_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번호 2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학교 중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하웁트슐레에서의 사회 과목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연관지으며 이루어진다. 일상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위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문서 번호 26 튜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튜링겐주의 문화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교육과정에 관해 발표한 임시계획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과목의 과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을 깨닫게 하며 점차 더 복잡해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해 이를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 대해 구동독에 대해 또 통일 과정의 결과 체험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업은 통상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며 교수학적으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들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관련지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도 연방정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990년도 직업교육자리 현황: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자리의 현황은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수치로, 직업교육자리의 공급이 수요를 약 18 퍼센트 초과하였다.
- 직업교육정책의 조건 및 중점 사항
-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
- 1990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직업교육자리 현황
- 1990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자리 현황
- 신연방주들 및 구연방주들에서 학교중퇴자의 직업교육현황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변화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청소년의 직업교육장려
- 노동진흥법(AFG)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계속교육(추가교육, 전환교육 및 사업체 적응교육)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 직업교육장려
- 구연방주들에서의 직업교육보조금

출처\_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번호 28**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1991년 4월 15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교육부장이었던 마리엔네 비어틀러가 계속교육의 개혁과 의미에 관해 연설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속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적 절차 확립의 징표이다. 계속교육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계속교육 운영주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은 계속교육법에 따라 규율한다. 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문서  
번호 29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사무국이 통일조약 37조에 의거해서 동독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기존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청은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년 이상의 교사직을 수행한 직업경력은 6개월 간의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상관없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직의 호칭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출처\_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문서  
번호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발췌]  
199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목표가 정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안과 미래에 대한 질문, 특히 통일된 독일에서의 정치적이자 사회적 통합이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고도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받아들여지도록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연습되어야 하며, 갈등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과 합의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배양되어야 한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문서  
번호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차관 리들; 연방의회의원 비스만(기민당)

내용\_

연방 경제부차관 리들은 통일 이후 연방 경제부 베를린 지청에 고용된 395명에 달하는 구 동독 경제통상부 및 환경에너지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연방 경제부가 어떠한 재교육 및 자격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중 181명은 본 혹은 베를린에 무기한으로 고용된 상태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1993년도 7월에 종료되는 시한부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그 교육 중 일부는 베를린 지청에서 직접 실시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문서  
번호 32

###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발췌]

1992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BLK)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연구지원위원회(BLK)가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변화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체제에서는 직업교육이 교육부문 중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직업교육에도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국가의 경제구조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직업교육은 서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제도와는 그 구조나 직업교육의 목표, 방법 및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1990년도 직업교육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고 교육 내용도 통일되었고, 국가적으로 승인된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출처\_**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프레프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2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연방정부의 교육부장관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회가 공급되어야만 하며, 신연방주의 경제구조 변화는 직업훈련을 위한 계속교육의 실행과정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 현황(사업체 내 직업교육 및 청소년의 교육형태)
- 직업교육의 내용적 구성과 구조문제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을 구연방주지역의 직업교육 실태에 맞게 조정하는 일
- 직업 계속교육
- 판매업 부문에서의 자격취득수요
- 신연방주 내 사회서비스에서 전문 및 지도인력의 계속교육
- 신연방주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지원

출처\_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f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의 할레 정신과병원의 의사 한스 요아힘 마츠박사와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가 신연방주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다. 마츠박사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부문의 변혁은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 부문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겪은 변화를 소화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어야 한다. 서독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을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독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고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한 바 없는 후견인 행세로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에는 동·서독지역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는 작센-안할트주의 어느 작은 지역 내 노동청 소속 직업전환조치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마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채 그곳 주민들과 대처해야 하는 식민지 경영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구동독지역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잘 협력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프로그램 그룹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사회교육학적 상담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직업적 요구조건이나 업무에 대해 수업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전달되어, 이후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처\_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내용\_

이 문서는 민사당이 제출한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질의는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해를 보았으며 구조변화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조치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체제적으로 차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자의 60%가 여성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90%에 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설명하였다. 360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의 노동정책에 투자되었고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직업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창업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도제로 직업훈련을 시작한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은 37.4%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답변을 통해 나아가 조기정년퇴직한 여성의 연금문제, 대학졸업 여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문서  
번호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  
1993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3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신연방주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연방지역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또한 아직 방향전환단계에 있다.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응하는 직업자격 조건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는 1992년도의 경우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가 종전보다 약 20 퍼센트 많아져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2,000여 개로 증가될 수 있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정부의 직업교육 장려는 중소기업들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직업교육훈련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생 및 다른 직업교육부문의 전문인력들의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번호 37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계속교육진흥법의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변경되었다.

- 계속교육 개념과 그 의미: 계속교육은 교육부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1절).
- 계속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학습의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1절).
- 계속교육의 운영주체 및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만들 권리를 지닌다(2절).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문서  
번호 38

동서독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년 2월 17일 및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내용\_**

이 문서는 계속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조직한 독일노동실무협회의 업무에 관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는 회원 단체 간의 경험교류 및 계속교육 세미나와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와 실무를 연결해 주는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있다.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서로 체계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직업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전수와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별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는 영역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력향상 및 기타 자격취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_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문서  
번호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자

**담당자 / 기관**\_ 매르키셰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중반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구동독의 주민을 위해 지역신문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기 신문 독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전략에 자문해 주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자문에 동원된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다.

**출처**\_ Zeitungsaus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문서  
번호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4년[발췌]  
1994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4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에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었다.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정부의 공동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수공업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독지역에서는 대단위 산업지역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 공급이 축소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일반 교육부문이나 대학교 교육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에 더욱 발전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계속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의 모음집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내 계속교육의 법적 토대는 연방주 헌법과 계속교육법(BbgWBG)이다.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은 33조에서 계속교육진흥 의무 외에도, 자유운영주체의 계속교육기관을 설치할 권리 및 직업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계속교육 기간 중 근무면제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계속교육법은 이와는 달리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의 실시와 같은 계속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 그를 통해 시장정책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계속교육 조치에 대한 기본적 지원은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약 40,000명의 주민당 2,400시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1996년도에 이 비율은 30,000명당 2,400시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적 지원을 위한 (총 비용이 전체 490만 마르크에 달하는) 인적·물적 비용의 50 퍼센트는 연방주가 부담한다.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연간 620만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1996년도부터는 총 지원금액이 약 830만 마르크로 증가해야 한다.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금액은 소액에 해당한다.

다른 연방주들의 상황을 보면 주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작센주의 경우 계속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 작센주는 계속교육기회의 제공을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직업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논문들은 모두 직업계속교육의 현재 수요와 관련하여, 또는 그 외 정치적 혹은 문화적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급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_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담당자 / 기관\_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노동복지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의 위임을 받은 독일노동실무협회에 의해 1992년에 세워진 동서지역 조정소의 업무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 기관은 유럽사회기금(Europäische Sozialfonds)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지역 조정기관은 노동정책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구동독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노동실무협회는 임금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자리, 자격취득, 중개보조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사회적 기업에 있어 담당기관을 아우르는 연방차원의 연합단체이다. 동서지역 조정소 설립의 출발점은 구동독지역의 조건과 필요에 부합하며 임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동서지역 조정소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통합모델로 발전하였다. 조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경험교류를 포함한 심포지엄, 계속교육 세미나, 실습 및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중개,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프로젝트에 자문해 주는 것이다. 이 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담당 주 행정부처, 지역행정처, 경제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역 교육 담당기관 및 조직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기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실업퇴치를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이런 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업무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독일노동실무협회가 추구하는 고용지원기관의 유럽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도 동서지역 조정소의 초지역적 교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서지역 조정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유럽의 다른 나라에 전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5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3-1994년도 직업교육훈련 지원률이 17.5 퍼센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 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명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청소년들에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다. (문서 내 개관 1. 참조) 지원자의 총 수는 171,100명이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이와는 달리 (총 455,200명 중 235,200명에 해당하는) 전체 지원자의 약 52 퍼센트의 지원자만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1994년에 신연방주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다음 해에도 충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 사업체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훈련은 직장 내 직업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은 고용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  
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부분 발취]-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달] 소수그룹;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이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과거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수료증 및  
능력증명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연방노동청(BA)은 연방직업교육연  
구원과 공동으로 동독 내 직업교육필요직업군과 서독의 직업군을 서로 비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동독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은 자영업  
적 수공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연방주들 내 중산층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하  
기 위해 인민소유산업체(VEI) 소속 마이스터('VE'-Meister)들은 다른 마이스터와 동등하  
게 자영업적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다.

1994년도 2월부터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적응능력평가가 직장 내에서 시행되었다. 이 평  
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신연방에서는 동독체제에서 상업 및 기업  
경영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적응능력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자격  
능력-능력개발-관리' 프로젝트(QUEM)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 중인 신연방주  
들 내에서 자격능력을 시장경제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응시키는 데 지원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였다. 그중 213,127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명은 직업교육수료자였다. 후자 중 38,477명은  
대학 졸업자였고 7,891명은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65,780명은 전문학교 졸업자였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54개 대학교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접근성의 정도, 연구시설과 설비 그리고 국제적 학술교류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동독대학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학사조직과 (장학금, 주거공간의 제공,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탁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1996년 말까지 24억 300만 마르크를 구동독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중 연방정부가 75 퍼센트를, 연방주들이 25 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연방주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방주의적 원칙 하에 새로운 대학교 체계가 이 지역에 구축되었다. 구동독지역에는 이제 15개 종합대학교, 21개 공공 전문대학교 및 12개 미술 및 음악대학교가 존재한다. 1989년도와 비교하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9,500명 감축되었다. 교수직의 수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새로운 교수 임용 절차들이 1995년도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경제부는 구동독지역 산업부문에서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였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문서  
번호 46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  
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의 연구 분야 발췌]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대학 외 연구기관은 주로 3개의 학술원에 소속되었다. 이들 연구소의 시설과 설비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연구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었다. 연방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달했던' 중요한 연구들도 있었다.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들 연구소들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방주들의 산하 기관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300명이 넘는 국내 및 외국의 학자들이 1990년 가을까지 이루어진 심사에 참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13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연구인력을 포함한 연구소 인력과 고용관계는 우선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뒤따른 사회적 후속 영향들은 특히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었다'(이 프로그램은 1992년도에서 1996년도까지 지속되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교육부는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구동독지역 연구 부문에 총 108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1995년도의 경우 이는 32억 마르크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설립된 신규 연구소들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 문제 등은 계속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담당자 / 기관\_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노동실무협회가 발간하고 엘렌 루트 슈나이더가 작성한 보고서로 통일 전 후 고용지원기관의 발전과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 붕괴로 인해 현재 독일에는 42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화된 실업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일련의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실업 그리고 특히 장기실업의 위험을 받으며 시달리는 개인 및 노동시장 정책의 기타 목표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을 사회 그리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용, 직능개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지원기관-임무 및 활동

고용지원기관이라는 명칭은 자율적으로 운영주체 또는/그리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공법 또는 사법 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지원 및 노동시장 관련 활동을 통하여 실업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하며,
- 국가가 지원하는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때 또한
- 구조정책적 임무를 인지하며
- 그리고/또는 직능개발 및 직업증개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기업, 회사, 이니시어티브, 프로젝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지원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된다:

- 지금까지 주로 서독지역에서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해온 기업 및 이니시어티브
- 사회복지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창업지원을 연결하여 세워진 사회적 기업과 고용진흥 기업
- 신연방지역에서 활동 중인 고용지원회사와 고용 및 구조개발회사

기본 여건:

1995년 실업인구는 400만 명에 달하였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에서는 장기실업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고착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직능부족을 보이는 중장년층, 그러나 또한 건강상 제한을 받고 중증 장애를 지닌 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장기실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구동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특히 장애가 되고 있다. 실업 감소, 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독일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고용지원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 연방사회복지법(Bundessozialhilfegesetz, BSHG)과 같은 급부법(Leistungsgesetz)에 따른 고용지원수단, 유럽연합의 지원프로그램, 연방 및 주의 지원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상황:

독일노동실무협회는 고용지원기관들의 전국적인 연합기구이다. 1994년 현재 이 협의회에 가입회원기관(1994년 현재 약 80개 회원조직에서 15,000여 명이 활동 중)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고용지원기관들은 현재 사회복지정책상의 통합기능, 구조정책상의 생산기능 및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시장기능을 맡고 있다.

출처\_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행한 1996년도 계속교육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교육연수제도가 브란덴부르크주에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피고용자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연수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정해졌다. 신연방주 중에서 이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 뿐이다.

199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사이에 1,663개의 프로그램이 연방주로부터 교육연수 참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았다. 그중 27%인 445회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25%인 414개 프로그램은 문화, 그리고 48%인 794개 프로그램은 정치와 관련된 성인교육이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재원은 1,330만 마르크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비용의 지원 및 연방주 공인기관 및 민간교육시설 그리고 중점 과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1994년도 8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171,440명의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84,258명이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는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였다. 반면 1995년 8월에는 164,166명 중 34,341명이 참가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때문에 주정부는 '경제현실 밀착형 자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능장려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위한 경쟁력의 개선, 일자리의 안정화 및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2년 이후 약 34,800명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격능력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당 1,300 마르크 상당의 평균 지원액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실업자가 창업을 할 때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은 1996년도 총 720만 마르크 상당의 총 자체 예산 중 530만 마르크를 계속교육에 투입하였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문서 번호 49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담당자 / 기관\_ 케어스틴 자이랑; 연방정치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으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청소년이 통일된 독일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직업교육과 실제 직장생활 간의 연결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정리되었다:

- 1990년도와 1993년도 사이에 직업희망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기회에 대한 주관적 추측에 있어 동·서 지역 간의 대비
- 구동독의 경우 1990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서독지역의 경우 1989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각각 동서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추이
- 1989-1990년도에서 1993-1994년도까지 청소년들 중 실업자 수와 실업기간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문서  
번호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점들  
1997년

담당자 / 기관\_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직업교육원이 청소년의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수년 간의 패널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목표는 직업교육 문제 및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그 외 청소년의 정서와 규범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1992-1993년에는 구동독지역 내 2,007명의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으로 서독지역의 777명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직업선택에 대한 의견,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사업체 내 학교 및 직업학교수업의 평가, 직업적 견해와 전망, 양친의 집과 가족의 의미.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문서  
번호 51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년

담당자 / 기관\_ 마르크 쉬들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행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통일 이후 독일 동서지역주민들 간에 직업자격능력과 업무상 기대능력치, 직업교육 적합성의 일치 내지 불일치의 정도와 그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지역 주민 간에는 직업교육과 일자리에 확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부적합하다고 조사된 구동독주민들의 대다수는 일자리보다 능력이 초과되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과 부적합한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주는 결과를 보면 동서지역 간에 더욱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직업능력에 부적합하게 고용된 경우가 더 많다. 구동독지역의 피고용자들은 서독지역의 피고용자보다 더 자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과 함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급여도 감수하고 있다.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로 인해 구동독지역 주민 중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것은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능력이 통일된 독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구동독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은 비교적 그에 상응하는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와 달리 특별한 직업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의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출처\_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담당자 / 기관\_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직업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에서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과 성과에 관해 연방직업교육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도 계속교육을 위한 자문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신연방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 외에, '계속교육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초자자체 계속교육상담소의 구축'이라 불리는 시험모델 프로젝트(1991-1994년도 시행)가 특히 현지에 계속교육상담소를 창립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사회기금(ESF)의 재원 및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 사업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에 한 곳의 상담소, 그리고 작센주에는 두 곳의 상담소를 세웠다. 구동독지역의 모든 상담소는 서독지역의 상담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직업교육연구원을 통해 자료수집 평가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에 농촌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대부분의 계속교육상담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하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도의 경우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 중 평균 55 퍼센트가 실업자였다.

출처\_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문서 번호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년-연표  
2009년 1월

담당자 / 기관\_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내용\_

이 문서는 2009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독일노동실무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이 협회는 1989년 1월 20일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협회의 목적은 1989년 1월에 작성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협회의 목적은 임금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협회의 창립 이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전과 주요 활동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출처\_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전문 매거진에 발표된 독일의 직업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관해 정리한 논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의회(Bundestag)가 1969년에 최초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1990년 7월 19일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가 이 법을 동독에서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독과 서독에서는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를 졸업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았었다. 동독과 서독의 직업교육체계를 비교해 보면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이 근로인력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드러난다. 국가 또는 사업체가 정하는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자리가 배정되었다. 직업학교(Betriebsberufsschule)의 목적은 직업훈련생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성숙하고 고도로 숙련된, 계급의식을 갖춘 전문노동자’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통일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게 돌아갔고, 모든 직업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었다. 구서독지역 청소년에게는 구동독지역에서도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는 약 7,000개의 직업훈련 자리가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출처\_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담당자 / 기관\_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내용\_**

이 문서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특히 독일통일에 있어 지식전이(Wissenstransfer)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없었다. 동독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았다. 변혁 이후 이러한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사회조합(Sozialverbänden)들이 운영주체를 맡고 연방 노동사회부와의 협력 하에서 '독일노동실무협회(BAG)'가 설립되었고 베를린에 동-서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업무보고서 기록들도 취합되었다. 사회조합들도 구동독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할 공간이나 숙소, 기계설비와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구동독 사람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의 자원(사회기금)이 주어졌고, 그 외에도 연방사회구조법 및 노동진흥법(AFG)에 근거한 자원, 예를 들어 임금비용보조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정이 지원되었다. 그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초기에는 구동독지역의 지자체들이 무엇이 지자체가 저야할 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 노동조합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출처\_**

문서  
번호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년 10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사회부(BMAS)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연방 노동·사회부(BMAS)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연방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1999년 구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 프로그램(Ausbildungsplatzprogramm Ost 1999) 및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이루어진 크세노스-특별프로그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교육, 그리고 분배’(XENOS-Sonderprogramm ‘Beschäftigung, Bildung und Teilhabe vor Ort’)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출처\_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연구부(BMBF)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F)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 '지역혁신 (InnoRegion)' 프로그램
- 지역혁신 성장핵심양성('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 진흥 프로그램
- 특별프로그램: "학문이 시장을 만든다"
- 연구과 수업에 있어 여성을 위한 성평등
- 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확충 프로그램
- 혁신능력센터
- 혁신포럼
- 경제관련 전문대(FH3) 내 응용연구
- 혁신 프로파일(InnoProfile)
- 직업교육 및 전문인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국가협약(2004-2010년)
- 대학교협약 2020
- 직장 외부 공동직업교육학교(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지원
- 직업스타터(Jobstarter)
- '기업과 지역' 혁신 이니셔티브
- '신연방주 내 첨단연구 및 혁신'

**출처\_**

담당자 / 기관\_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학술부 소속 장학관과의 인터뷰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동독 출신 교사들은 통일 이후 자격확인 절차(Bewährungsfeststellung)를 거쳐 신연방주들 내에서 계속 교직을 이어나갔다. 단지 매우 적은 수의 교사들만이 그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교사들의 봉급은 연방이 정했는데, 그에 있어 동서독지역 간의 차등 급여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봉급 집단은 동독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 단지 서독지역 급여체계의 60% 만을 받았다. 하지만 급여는 수년에 걸쳐 동서독 간에 균등하게 조정이 되도록 체계가 잡혔다. 다른 한편, 베를린에서는 직원들 간의 급여 균등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100% 달성되었다.

비록 교사들의 고용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1990년도에 주교육청이 설립되고 교사의 고용을 중앙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었다. 이 관청은 교사들을 베를린 전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서베를린의 학교들 사이에 교사들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또한 교사들도 서로를 알 기회가 생겼다.

통일 후 베를린 전역에서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른 연방주들은 자신의 파트너 연방주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것을 받아들였다.

출처\_

문서  
번호 59

##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의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마싱 교수는 독일 정치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은 교사의 추가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시민 교과가 존재했다. 통일이 교육부문 전체를 개혁할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보아 서독의 체제가 동독지역으로 그대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들 간의 파트너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속교육 기회는 지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다. 그 이유가 모든 교사들을 추가교육시키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추가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 출처\_

담당자 / 기관\_ 베르너 퀸첼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정치교육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로 설립된 직후에 브란덴부르크주 주총리실에 임시로 구성된 ‘정치교육’ 위원회가 존재했다. 주정치교육원은 인권운동가 한스-유르겐 미셀비츠의 주도 하에 1992년 7월 1일에 공식으로 발족하였다. 설립 단계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파트너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으로부터 물질·인적 지원을 받았다.

1991년도 하반기에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예산 중 주정치교육원의 행정비용을 위해 109만 마르크, 정당 재단과 사립 운영주체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금으로 450만 마르크가 각각 지출되었다. 1992년도까지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민 1인당 정치교육을 위해 2.6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국민 1인당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방정치교육원이 0.92 마르크, 베를린 0.82 마르크, 작센주가 0.34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그것은 브란덴부르크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정치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도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는 1인당 2.12 마르크를 정치교육 지원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1991년도에는 책정된 총 551만 마르크 중 단지 323만 마르크만이 지출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밀도가 낮기에 주정치교육원 단독으로 전역을 포괄하는 교육기회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정치교육원은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민간 운영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나아가 학교, 종합대학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의회와 같은 정치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93년도에는 약 560만 마르크의 재원이 지원될 수 있었는데, 1999년도에는 약 410만 마르크 밖에 되지 않아 운영주체들의 역량 발휘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인 정당 재단 및 기초지자체 정치재단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 운영주체들이 이러한 감축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1995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지원 재원의 약 40%가 감축되었다. 앞으로도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교육 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감축해야만 한다.

출처\_ [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Stand: 15.6.2015)